日帝의 朝鮮强占과 韓國의 독립운동

徐 仲 錫

日帝의 朝鮮强占과 韓國의 독립운동

徐 仲 錫

Ⅰ. 일제의 지배정책
1. 머리말
2. 일제 지배정책의 정치적 성격
3. 同化政策
4. 동화교육
5. 황국신민화운동·황국신민화교육
Ⅱ. 독립운동
1. 머리말
2. 3·1운동 이전의 1910년대
3. 3·1운동과 그 이후 독립운동(1919~1931)
1) 3·1운동
2)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
4.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 독립운동
1) 1930년대의 독립운동
2) 1940년대의 독립운동과 건국준비
Ⅲ. 결론

Ⅰ. 일제의 지배정책

1. 머리말

일제는 1910년 한국을 강점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外族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들어갔다. 한때 한반도의 일부가 외족의 지배하에 놓인 적이 있었고, 高麗는 1세기 가까이 元의 內政간섭을 받았다. 그러나 일제의 강점기처럼 외족의 직접적 지배를 받은 적은 없었다. 1945년까지 계속된 일제 지배 35년은 20세기 전반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기로서, 근대적 인간을 구현시키고, 근대적 사회, 근대적 국민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런데 일본은 유일한 非白人 제국주의국가로, 天皇制 국가, 天皇制 파시즘하에서 서유럽·미국에 비해 일본인조차 인간의 기본권리가 현저하게 제약을 받았고, 의회정치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 일본의 자본주의도 서유럽·미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는데, 만성적으로 시장이 협소하고 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히 부국강병에 의한 대일본제국건설에 집착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외침략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은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는데 咽喉였고 교량과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1]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한국이 일본제국으로부터 떨어져나가 독립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2] 그렇지만 한국인은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1) 長谷川好道 조선총독은 1919년 6월 사직하면서 조선은 우리 대륙발전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동화정책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崔錫榮,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서경, 1997, p.42).
2) 1942년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취임했던 田中武雄는 독립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마지

국가를 영위해왔다. 그리고 일본에 문화를 이식하였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일본 문화를 얕잡아보았으며, 倭寇의 노략질이나 1592년에 침략한 壬辰倭亂, 개항이후의 경험과 1910년 강점 이후의 심한 차별·억압정책으로 반일감정이 높았고, 독립운동도 치열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가 서유럽·미국과 같은 백인 제국주의국가에 비해 민주주의나 시민의식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한국은 절대적으로 대일본제국에서 분리될 수 없는 不可缺한 지역이라고 확신했는데,[3] 한국인은 반일감정이 높았고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잠재적으로 불안정하여 쟁란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4] 바로 이러한 점들이 상호 작용하여, 서유럽·미국이 인도, 인도차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 구사한 제국주의정책과 일제의 한국지배정책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한국지배정책은 만주국의 경우와도 큰 차이가 있었고, 문관총독도 있었고 황국신문서사를 외게 하지도 않은[5] 대만지배정책과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일제의 한국지배정책은 1910년에서 대대적으로 3·1독립시위운동이 일어난 1919년까지의 武斷통치와, 1920년대의 문화통치, 1930년대 중반 이후의 군국주의적 파쇼적 통치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문화통치기에는 일본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집회 결사 출판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는 있었으나, 무단통치기와 군국주의적 파쇼적 통치기에는 그러한 자유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는 전시체제에서 황국신민화운동이 광적으로 벌어진 민족의식말살시기였다. 이 점은 인도나 인도차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신장되고, 1930년대에 더욱 크게 신장되어, 베트남의 경우 노동자 농민운동 등 사회운동과 반제 민족운동이 활기차게 전개되었으며, 사회주의자들도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대비를 이룬다.[6] 1930년대 베트남인들의 왕성한 활동은 베트남인의 민족해방운동에 기본 동력이 되었다.

막까지 한국을 통치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國是'로도 표현했다.(조선총독부고위관리의 육성증언, ≪식민통치의 허상과 실상≫, 정재정역, 혜안, 2002, p.176, 252)

3) 서유럽·미국은 인도나 필리핀 등이 언젠가 독립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있었다. 인도 국민의회는 1929년 영국에 완전 독립을 제의했고, 1930년 1월 26일을 독립기념일로 선포했던바,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1935년에 공포된 인도통치법은 인도를 독립국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이 뚜렷이 설정되어 있었다.(조길태, ≪인도사≫, 민음사, 2000, p.497-499, 519) 필리핀의 경우 이미 1916년의 존스법안에서 입법상의 자치권을 부여했고, 장차 안정된 정권이 수립되면 독립을 부여한다고 약속했고, 1934년 미국의회를 통과한 타이딩스 맥더피법에 의해 자치정부가 세워져 케존이 1935년 11월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金洪喆, <1919년 전후 愛蘭·比·印의 민족운동> ≪3·1운동 50주년 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p.999)

4) 마크 피티(Mark R. Peattie), ≪식민지≫, 淺野豊美역, 일본 讀賣新聞社, 1996, p.162 참조

5) 마크 피티, 앞의 책, p.248

6) 베트남의 경우 1933년 사이공시의회 선거에서 인도차이나공산주의 등 연합세력은 두 사람을 당선시켰고, 그 다음해 선거에서는 베트남인에게 할당된 6석중 4석을 차지했다. 베트남에서는 두 차례 선거로 신문을 통해서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국주의를 공격하는 새로운 유형의 반식민지 운동이 가능해졌다. 프랑스총선에서 인민전선이 1936년에 승리한 이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베트남 민족주의운동에 새 국면이 열렸다. 각종 신문과 팜플렛이 간행되었고, 인도차이나회의와 행동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특히 북부지방은 공산주의자들의 독무대였다. 그렇지만 프랑스에서 1939년 8월 인민전선이 붕괴하자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탄압을 받았고,1940년 6월 일본군이 들어옴으로써 암흑기를 맞았다(劉仁善,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2002, pp.350-353).

일제의 전제적 통치로 한국인은 자료를 남기기가 어려웠던바, 이 점은 일제지배정책을 연구하는데 기본적 제약이 되고 있다. 일제지배기간에 한국인이 자료를 남기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는 '통감기'와 무단통치기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10년 한국을 강점했을 때 일제는 일제走狗들의 단체인 일진회조차 해산시켰을 정도로 철저히 한국인의 결사를 제한했고 언론 출판 활동을 억압했다. 통감부시기에는 계몽운동이 왕성하게 전개되었으나, 무단통치기에는 칠흑같은 어둠의 반동시기였다. 통감부시기에는 신채호 등이 한국사나 외국의 망국사나 건국사 관계 저서와 글, 그밖에 계몽적인 저서 글 등을 통해 근대적 민족정신과 애국심, 자유·민권·평등의식을 고취하였다. 통감부시기와 일제통치기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가는 교과서만 비교해보아도 단박에 알 수 있다. 통감부 통제하의 학부가 검열제도 등을 통해 제약을 가했는데도 이 시기의 교과서와 일제지배기의 교과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자주적 인간상을 기술하는데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근대인으로 성장하는데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말살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떠한 차이를 갖는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통감부는 광무신문지법(1907.7.) 등의 악법으로 언론을 탄압했지만,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은 나름대로 한국인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었고 통감정치를 비판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무단통치기에는 조선총독부 어용지인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만이 있었다. 통감부시기에는 각종 학회나 단체의 회보 등 수많은 잡지가 있었지만, 무단통치기에는 꼽을만한 잡지는 ≪청춘≫ 밖에 없었는데, 그 잡지는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낸 ≪學之光≫과 비교해보아도 큰 차이가 있을 만큼 '비정치적인' 잡지였다. 문화통치기에는 일제의 유화정책아래 신문화 신사상을 전파시키고 사회운동 민족운동과 관련된 적극적인 활동이 신문 잡지와 결사 등을 중심으로 일제지배정책을 비판하는 자료를 상당수 남기게 했으나, 1931년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 신문 잡지와 결사들은 점차 무력해졌고, 1937년 이후에는 언론 잡지는 물론이고 종교단체까지 파시즘적 군국주의적 침략전쟁인 '성전'의 옹호와 황국신민화운동을 찬양하는데 동원되었다.

<일제의 지배정책>은 먼저 일제 지배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기술하고, 동화정책, 동화교육, 황국신민화운동·황국신민화교육을 기술하고자 한다.

일제의 동화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다. 그것은 프랑스의 동화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동화주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고, 시기 또는 조선총독에 따라서 정책이 달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동화주의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렇지만 여러 조선총독이 동화주의 또는 내선일체나 내지연장주의 등을 표명하고, 동화정책을 강행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일제가 한국에서 강행한 동화정책은 프랑스가 알제리아 등의 식민지에서 편 동화정책과는 의도와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일제강점 직후부터 일제패망때까지 교육정책으로 표명한, 근대적 시민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충량한 국민'을 육성한다거나, 황국신민화란 용어, 그리고 제2대 조선총독 長谷川이 이임하면서 한국은 "우리 대륙 발전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동화정책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라고 언명한 데에[7] 잘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 교육정책을 중시한 것은 그것이 동화정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7) 주 1)과 같음

2. 일제 지배정책의 정치적 성격

일제가 백인 제국주의국가의 인도·동남아지배정책과 차이가 나게 총독 전제통치 또는 헌병·경찰통치를 하였다는 주장은 해방후 한국에서 널리 통용되어 왔다. 조선총독의 통치는 한국인의 기본적 자유·권리의 享受의 정도, 총독의 권한과 위상, 조선의회에 의한 견제의 존재 여부, 일본의회에 의한 견제의 성격, 헌병과 경찰의 활동 등으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10년 일제의 강점이후 무단통치가 실시되어 한국인은 결사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없었다. 총독부 경무총감의 部令 제3호 '집회 取締에 관한 건'에 의해 집회의 자유는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허용되지 않았으며.[8] 합병공로로 은사금까지 받은 일진회 대한협회를 포함하여 모든 정치·사회단체가 해산되었다. 1919년 3·1운동이후 새 총독이 부임하면서 친일파와 대자산가에 의한 신문의 발간을 허용하였고, 결사 자유도 어느 정도 존재했으나, 이 시기에도 인도 필리핀은 물론이고 베트남 등과도 대비되게 정치적 결사는 친일단체 외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모든 출판물은 원고를 미리 검열받았다. 신문 잡지 서적 등에 실린 글들은 압수되거나 경고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일부 기사가 삭제되었고 또 시커멓게 지워져 나왔다.[9] 집회는 옥내에 한해서 허용되었는데, 그것도 엄격한 허가제였고, 항상 臨席경관이 집회를 지켜봤으며, 집회 도중에 중지명령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집회를 제한 금지하고 해산시킬 수 있는 재량권이 경찰한테 부여된 것도(보안법 2조) 문제였지만, 중요 단체의 집회의 허가나 불허, 집회 중지 등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예컨대 1927년에는 신간회의 발족, 노농총동맹의 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으로의 분리 등으로 사회운동 민족운동이 활기를 띠었는데, 이들 단체(청년총동맹 포함)는 창립 이후 일체 전국대회가 허용되지 않아 지도부개편이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무기력해졌다. 신간회는 1931년 해소대회를 연다고 하자 그때서야 집회허가를 내주었다. 집회의 부분적인 허용도 일제의 만주 침략 이후 점차 족쇄가 채워졌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戰時통제를 받았다.

1920년대조차도 한국인은 인도 필리핀 등과는 달리 독립운동이나 반제 활동이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일독립투쟁은 국내에서는 3·1만세운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 등과 같은 '불법'시위를 제외하면 지하에서만 가능하였고, 중국 등 국외에서 분산되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협동단체인 신간회는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아 1929년 12월 처음으로 대중집회인 민중대회를 가지려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간부들이 대거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다. 관헌의 자의적인 법집행도 사회적인 활동을 위축시켰다. 조선총독부 검사는 조선형사령 제12조에 근거하여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압수 수색 검증 및 피의자 구인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한테까지 이같은 권한이 부여되었다.[10] 문화통치기인데도 반

8) 서울에서는 골목에서 세 사람만 모여서 얘기를 해도 붙들어갔다(李熙昇, <상투를 짤라 초립에 담고> ≪털어놓고 하는 말≫, 뿌리깊은 나무, 1978, p.71)

9) 동아일보의 경우 창간이래 10년간 3회 발행정지 처분을 받아 280여일 신문이 나오지 못했고, 299회 압수, 발매, 반포금지되었으며, 이밖에 경고 견책 기사삭제 등 유형무형의 압박을 셀 수 없을 정도 받았다. 조선일보는 1920년에서 1929년 5월까지 318회의 압수 처분을 받았고, 4회 발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926년에 53회, 1927년에 55회의 압수, 발매 처분을 받았다. (金圭煥, ≪일제의 對韓 언론·선전정책≫, 二友출판사, 1982, p.166, 228, 234)

일적인 인물들은 '要視察' '요주의' 인물로 경찰장부에 오르게 되어 늘 감시 미행 가택수색 검거 구류 투옥을 당했다. 그리고 이들과 이들의 가족은 여행 취직 학교입학 등을 방해받았고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위협을 받았다.[11] 같은 시기에 호구조사규정에 따르면 실제로 대부분의 인텔리나 활동가가 계속 당국의 조사 또는 사찰을 받았다.[12] 한국은 官憲의 전제통치하에 놓여 있었다.

조선총독은 3·1운동 이후 문관도 취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지만, 대만과는 달리 실제로는 모든 총독이 육해군 현역 대장으로만 부임하였다. 조선총독은 종합행정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선총독은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재무, 산업경제, 경찰, 문교, 사법, 교통, 통신, 전매 등의 각종 행정권을 총괄하였던바, 조선총독부 각 局部는 일본의 각 省과 같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모두 일원적으로 총독의 지휘감독을 받았다.[13] 조선총독은 또한 육해군사령관한테 出兵을 청구할 수 있었고,[14] 법률에 대신하는 制令을 發布할 수 있는 制令制定權을 보유하였으며, 직권 또는 위임에 의해 총독부령을 발하고 이에 1년 이하의 자유형, 2백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명령권 등 극히 광범하고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다. 細川嘉六는 이와 같이 총독한테 권력이 광범히 집중된 것이 조선정치의 근본이라고 조심스럽게 평했다.[15]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독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한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인도의 경우 1919년 공포된 인도통치법에 의거한 입법의회는 입법권 및 예산 심의권을 가졌고, 상원의 경우 60의석 중 33의원을 선거로, 하원의 경우 145의석 중 104명을 선거로 선출했으며, 시·읍·村會 의원의 대부분 또는 전부가 인도인이었다. 1930년에 합의 본 英·印 평화협정은 인도인의 자치를 대폭 허용해 의회의원을 소수민족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선으로 하였으며, 선거권도 크게 확장되었다. 1935년에 발포된 인도통치법에 의하면 연방의회는 재산 자격을 갖춘 인도인 유권자들이 선출한 의원들이 다수를 점했고, 州정부는 주민이 선출한 주의회에 책임지는 대의정치가 행해졌고, 주지사는 권고만 했을 뿐 실제 우두머리는 수석장관이었다.[16] 그렇지만

---

10) 金世政,, <판례를 통해본 보안법과 制令 제7호>, 비판 1931. 5. p.97

11) 司空杓, <조선의 정세와 조선공산주의자의 임무>, 1928. 朴慶植편, ≪조선문제자료총서≫ 7, 일본 아시아문제연구소, 1983, p.50

12) 1922년의 호구조사규정에 의하면 외근순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호구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 性行 사상 당파 및 경력 등 6항목을 조사해야 했고, 요시찰인, 유학생, 신문 잡지 기자 및 통신원, 정치 및 시사 논평자, 과격 粗暴 언동을 하는 자, 그밖에 고등경찰상 주의해야 할 자 등 6종류의 者들을 호구조사 때 특히 注意 사찰하게 했다.(糟谷憲一,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치> ≪근대일본과 식민지 2 - 제국통치의 구조≫, 일본 岩波書店, 1992, p.132)

13) 鈴木武雄, <朝鮮統治의 性格과 實績>, 일본 大藏省管理局, ≪日本人의 海外活動에 關한 歷史的 調査≫ 3, 1947(韓國 高麗書店에서 1985년에 影印), p.13.

14) 1919년 이전에는 총독이 육해군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糟谷憲一, 앞의 글, pp.126-129)

15) 細川嘉六, ≪植民史≫, 일본 理論社, pp.312-313

16) 矢內原忠雄,, ≪植民及 植民政策≫, 有斐閣,, 1941, pp.331-332 ; 조길태, 앞의 책, pp.495-499.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의 입법의회 또는 자문의회 등에 대해서는 김홍철, 앞의 글, p.999, 金章煥, <比律賓은 독립되는가>, 비판 1931. 5. pp.10-11, 矢內原忠雄, 앞의 책, p.339, 벨, ≪蘭·佛印植民司政≫, 羽俣郁역, 일본 伊藤書店, 1942, 板垣與一, ≪아시아의 민족주의와 경제발전≫, 金泳國역, 汎潮社, 1986, pp.25-27, 33-34, 車錫基, ≪식민지교육정책비교연구≫, 集文堂, 1989, p.296. 高柄翊, <세계사적으로 본 일제의 식민통치> ≪한민족독립운동사 5 - 일제의 식민통치≫, 국사편찬위원회, 1989, pp.747-748 참조. 프랑스는 코친차이나는 직할지로 직접통치를 하였는데, 안남에는 황제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는 각각 왕이 있어 모두 각기 궁정과 재래식 관리들이 프랑스 행정체계와 병립하고 있어서 일단 국가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 형태를 취했다.(고병익, 위의 글, pp.747-748)

한국의 경우 조선총독부에 대한 민의대표의 중앙기관으로 의결권있는 입법의회는 물론이고, 허수아비기구로서 민족분열정책에 활용된 중추원을 제외하면[17] 자문기관도 설치된 바가 없어 중앙행정은 총독의 獨斷專制에 맡겨졌다.[18]

조선총독은 일본정부나 의회로부터도 독립적인 존재였다. 조선총독은 일본천황에 直隷하여, 대만과는 달리 내각총리대신이나 각 성 대신한테 지휘감독을 받지 않게 되어 있었다.[19] 조선총독은 일본의회에서 질의응답을 받지 않아도 되었다. 일본천황직례의 조선총독만이 조선 '민의'를 대표하였다. 한 연구자는 천황이라는 최고 권위를 근거로 한 조선총독 지위, 지배의 정당성 保持는 일제의 한국지배의 특질이고 또 그것에 의해 조선총독부 지배권력이 중앙에 종속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대등 이상의 관계를 갖게 되어 정당정치의 전개를 일본에 한하게 하는 효과를 갖게 했다고 기술했다.[20]

헌병·경찰통치는 헌병·경찰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감시와 고문, 감옥과 강제전향과 관련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무단통치기의 헌병·경찰보다 문화통치기의 경찰이 수적으로 증가했는데,[21] 무단통치기의 헌병뿐만 아니라, 문화통치기 이후의 경찰도 비상한 공포의 대상이었다. 과도한 경찰통치가 실시된 것은 독립운동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하여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감정까지 반역사상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었다.[22] 경찰은 의병 공격 등의 군사활동,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의 정치사찰, 범죄 즉결 등의 사법권행사, 납세독촉 등의 경제 활동, 학교 서당 시찰, 일어 보급 등의 학사활동, 도일노동자 단속 등 외무활동, 법령보급 등의 조장행정, 위생활동 등을 했는데,[23] 전시 중에는 노무 징병 식량공출 등에 강력한 역할을 하는 등 늘 총독의 시정방침 구현과 세상동태 파악에 유감없이 위력을 발휘하였다.[24] 고등경찰은 노령 미주 등 해외 각지까지 독립운동자를 미행, 잠복 추적하여 감시, 체포하고, 심지어는 밀정을 시켜 암살하기도 했다. 도지사도 道令을 발동하여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구류, 백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25] 경찰 또한 태형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 백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즉결심판권을 갖고 있었다. 태형은 수치감을, 징역이나 벌금형은 두려움을 주었다. 즉결처벌은 1911년 18,100여건, 1913년 21,400여건, 1918년 82,121건, 1921년 73,262건으로 강점초기보다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많았다.[26]

일제의 지배정책 중 민족분열정책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인도나 동남아시아와는 달리

17) 중추원은 3·1운동때까지 회의가 한번도 소집된 적이 없었다.(金雲泰, <조선총독부의 구조와 특질> ≪한민족독립운동사 5 -일제의 식민통치≫, p.112). 중추원은 주로 관습이나 신앙에 관한 문제에 대해 諮詢을 받았고 중요한 사항들은 그곳에 문의하지 않았다.(A. J. 그라즈단제브, ≪한국현대사론≫, 李基白역, 一潮閣, 1973, p.42, 248)
18) 矢內原忠雄, <朝鮮統治의 方針>, 李種植편, ≪朝鮮統治問題論文集≫, 1929, 1929, p.118
19) 일본 대장성 관리국, 앞의 책 2, p.101-102
20) 岡本眞希子, <總督政治와 政黨政治 - 二大政黨期의 總督人事와 總督府官制·豫算> ≪朝鮮史硏究會論文集≫38, 일본 綠陰書房, 2000, p.48-52
21) 1919년 개편당시 헌병 8,179명, 경찰 6,322명으로 14,501명이었는데, 보통경찰로 개편된 같은 해 연말에는 경찰이 20,648명이었다.(金大商, ≪일제하 强制人力收奪史≫, 正音社, 1975, p.46)
22) 鈴木武雄, 앞의 글, p.6
23) 김운태, 앞의 글, pp.106-107
24) 일본 대장성 관리국, 앞의 책 2, pp.126-127
25) 糟谷憲一, 앞의 글, p.128
26) 김운태, 앞의 글, pp.107-108

인종적으로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분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인제국주의국가들처럼 분할통치(divide and rule)정책[27]을 쓰는 대신에 계급분단정책을 썼다.[28] 지주 자본가 儒林 교육가 종교가 그 밖의 유지 등 한국인 상층을 회유하고 끌어들이는 한편, 소작인 노동자들의 농민운동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가혹한 억압정책을 쓴 것이다. 이러한 민족분열정책은 흥미 있게도 3·1운동 이후 齋藤實이 조선총독으로 부임하여 소위 문화정치를 펴면서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는데, 민족분열정책은 문화정치와 표리의 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齋藤총독의 친일세력 민족개량주의세력의 육성과 후원, 자치운동 참정권운동의 후원, 실력양성운동으로서 전개된 한국인의 문화운동의 지원 등은 다름 아닌 민족분열정책이기도 했다.[29] 齋藤은 2회에 걸친 총독 재임기간에 자치-참정권문제로 민족운동을 분열시켰고, 중추원과 지방제도 개정을 통해 친일세력을 양성했다. 그와 그의 참모인 阿部充家는 3·1운동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천도교 간부 崔麟, 3·1독립선언서를 기초한 崔南善을 가출옥으로 석방하고, 東京2·8독립선언서를 기초한 李光洙를 상해임시정부로부터 끌어내 실력양성운동, 민족성 개조운동 등 개량주의운동을 적극 벌이게 한 것은[30] 천도교를 분열시키는 등 민족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중일전쟁 이후 황국신민화운동에 적극 나섰다. 宇垣一成총독의 중견인물 양성이나[31] 중일전쟁 이후의 황국신민화운동도 민족분열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3. 同化政策

여러 조선총독이 동화정책이나 내선일체, 내지연장주의를 표방했는데, 일제강점기 총독통치에 비판적인 학자든 관변학자든 시기와 성격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도 동화정책을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32]

식민정책 중 동화주의란 식민지에 대해 본국에서와 동일의 권리, 동일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식민지는 본국의 연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33] 원래 식민지는 모국 영토의 단순한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념의 산물로서, 식민지는 본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어야 하고, 따라서 식민지는 본국과 동일한 제도 하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34] 동화주의는 주로 프랑스의 알제리와 서인도제도, 영국의 아메리카나 아일란드 등에서의 정책을 가리켰다.[35] 프랑스가 종속주의에서 동화주의로 나아간 것은 1791년 국민공회 헌법에서였던바, 식민지 거주자들은 인종 여하를 불문하고 프랑스시민으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된 일체의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였다.[36] 프랑스

27) 분할통치정책에 대해서는 板垣與一, 앞의 책, pp.14-17 참조
28) 姜東鎭, ≪日本의 朝鮮支配政策史硏究≫, 일본 東京大學出版會, 1979, p.395
29) 강동진, 위의 책 및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 上,, 일본 靑木書店, 1973, pp.218-219 참조
30) 강동진, 앞의 책, pp.321-327, 331-356, 366-403
31) 富田晶子, <농촌진흥운동하의 중견인물의 양성> ≪일제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출판사, 1988 참조
32) 矢內原忠雄,, 앞의 글 ; 鈴木武雄, 앞의 글 등 참조
33) 矢內原忠雄,, 앞의 책, p.304
34) 板垣與一, 앞의 책, p.20
35) 村上勝彦, <矢內原忠雄의 植民論과 植民政策> ≪近代日本과 植民地 4-統合과 支配의 論理≫, 일본 岩波書店, 1993, p.220 참조
36) 板垣與一, 앞의 책, p.20

인들은 평등 박애의 대혁명이념을 받들고 프랑스문화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녔으므로 어떤 이민족에게든지 이 문화를 보급시키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어 가능한대로 프랑스인으로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37]

일제는 강점기에 조선에 대해 一視同仁 혹은 內鮮 一體의 동화정책 곧 內地延長主義정책을 편다고 자주 강변하였다. 초대총독 寺內正毅도 1910년 8월 원래 병합의 취지는 피차 차별을 철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38] 2대 총독 長谷川好道는 1919년 7월 1일 이른바 諭告를 통해 "조선은 즉 제국의 판도로서 그 속방이 아니다. 조선인은 즉 제국의 신민으로서 내지인과 하등의 차별 없다. 조선의 통치 역시 일찍이 동화의 방침에 基해 일시동인의 大義에 則하여 시행했다"라고 말했다.[39] 이러한 주장은 패전 후에도 계속되어 일본 大藏省에서 펴낸 책의 '조선통치의 최고방침'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결과는 어떻든 내선일체를 구체화한 역대 총독의 제정책은 통치자의 의도에 있어서 혁신적인 동화정책이라 할만하다. 民度 낮은 후진 조선인을 내지인의 레벨로 끌어올려 內鮮人을 전혀 평등히 하고 내지인의 우월적 차별대우 또는 감정을 絶滅시키려는 숭고한 목적으로 계획, 추진되었다는 면에서 볼 경우, 진보적이고 혁신적이고 또 민주적이라는 것은 異民族통치사상 그 類를 볼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40]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학살 등 만행을 자행하면서 대동아공영이라는 인류의 숭고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논리와 같은 주장을 패전 후에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미화는 일제의 대표적 지식인한테서도 보인다.[41] 일제는 내선일체 내지연장주의 일시동인을 제창하면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같은 선조로부터 나왔다는 소위 日鮮同祖論 또는 同祖同根論이라는 허황한 주장을 유포시켰다.

그런데 일제의 동화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역대 조선총독 등은 동화정책을 표방한다고 해서 그것이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寺內는 관습조사의 의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국은 '제국내지'와는 다른 특수한 통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42] 내선일체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조선총독 南次郎은 자신이 역설한 내선일체가 당장 무차별 평등을 실현시키자는 것이 아님을 일본인과 한국인한테 오해가 없도록 주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43] 이들한테 내선일체 내지연장주의 일시동인은 실제는 빈말에 지나지 않았고, 차별철폐는 한국인의 문화와 民力이 '향상'되어 천황의 지배력에 '복종'하게 되는 훗날로 미루어졌다.[44] 조선총독부 관리 山名酒喜男가 내각총력전연구소에서 동화란 항상 두발 세발 앞서가는 일본인 뒤를 감사하는 마음을 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은[45] 조선총독부의 동화정책을 간명히 설명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 있는 일본

37) 고병익, 앞의 글, pp.752-753
38)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정연보≫, 1912, 부록 p.20 훈령
39) 糟谷憲一, 앞의 글, p.124에서 재인용
40) 일본 대장성 관리국, 앞의 책 2, p.5.
41) 문필가 德富蘇峰이나 경성제국대학총장 山田三良의 글 참조(강동진, ≪일제언론계의 한국관≫, 一志社, 1982, pp.161-163 ; 李進熙,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일본학계> ≪한민족독립운동사 5 - 일제의 식민통치≫, pp.694-695)
42) 최석영, 앞의 책, p.36
43) 宮田節子,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 李熒娘역, 일조각, 1997, p.165, 185 참조
44) 糟谷憲一, 앞의 글, p.125

인이건 한국에 있는 일본인이건 일반 일본인들도 차별이 철폐되는 것은 반대했다.[46] 吉野作造나 矢內原忠雄 같은 일본인은 극히 소수였다.

일본인과 한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분야를 찾아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일제는 자신의 헌법도, 明治國家 교육전략도 한국에 적용하지 않았다.[47] 패전 직후 일본 대장성에서 펴낸 책에도 차별정책이 몇 가지 열거되어 있다. 곧 정치상 참정권, 지방의회, 의원선임방법에서, 행정상 총독의 종합행정권과 관리임용에서, 입법 상 制令에서, 경제상 관세제도, 경제권, 전시경제독자정책에서, 교육상에서, 경찰 取締上 도항금지 등에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다. 법률의 경우 제령의 존재외에도 다른 차별이 있었다. 일본제국의회는 일본과 한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또 조선에만 시행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지만, 그 밖의 법률은 한국에 적용되지 않았다. 한국의 사법기관은 일본과 별개의 계통을 가졌고, 재판관의 임용, 자격, 신분보장은 일본은 법률로 정했지만, 한국은 조선총독의 명령인 제령으로 정했다.[48] 총독부 관리의 경우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급료 차이가 적지 않았고, 고위직에는 한국인이 소수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1925년 3월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총독부 및 소속 관서 전체 직원의 35.6%였는데, 이중 칙임관은 20%, 고등관 및 고등관 대우자는 29.7%였다.[49] 총독부 본부는 전체 직원의 15.4%가 한국인으로, 그중 고등관이 5.3%였고, 칙임관은 학무국장 李軫鎬 한 사람이었다. 같은 시기 경찰관의 경우 한국인은 전체 경찰관의 39.7%였는데, 경찰부장 13명 전부, 경시 경부 경부보의 78.0%가 일본인이었다.[50]법조계의 경우 1912년에 판사가 일본인이 161명, 한국인이 38명이었고, 검사는 각각 54명, 3명이었으며, 1940년 9월 현재 고등법원에는 한국인이 한명도 없었고, 覆審法院은 35명중 4명이 지방법원은 약 10%가 한국인이었다. 설령 판사 중 2명이 한국인이라도 재판장은 절대적 거부권을 가진 일본인이었다. 또한 비슷한 경범죄일 경우 일본보다 한국이 엄했다. 일본은 100만 명당 병원 수에서 한국의 6-7배, 의사 수에서 7배였으며, 1938년 한국 관립병원 민족별 환자 수는 일본인이 334,438명, 한국인이 389,739명이었다. 1940년에 한국 내 일본인은 69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였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대학은 하나였고 형무소 15, 감화원 3, 보호관찰소 7, 형무소 지소 11개소였다.[51] 부산부두에는 탑승구가 일본인용과 한국인용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한국인은 엄격한 검문을 받아야 했다.[52] 한 일본인 연구자는 일본은 한국에 대해 경제면에서 프랑스보다 철저한 본국 중심의 차별정책을 썼으며, 관세동화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53] 외형상으로 볼 때 창씨개명은 프랑스의 동화정책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

45) 宮田節子, 앞의 책, p.176
46) 고병익, 앞의 글, p.754, 宮田節子, 앞의 책, p.184 참조
47) 마크 피티, 앞의 책, p.222 참조
48) 일본 대장성 관리국, 앞의 책 2, p.5-6, 104-105,
49) 한국인 고등관 및 고등관대우자는 군수가 190명(일본인 26명), 중추원 70명으로 이들이 전체 한국인의 71.9%를 차지했다.(糟谷憲一, 앞의 글, p.129) 한국인 칙임관은 도지사 일부 및 道참여관이었는데, 한국인 도지사는 도 내무부장이 견제 감시했고, 도참여관은 1920년대까지는 도장관의 자문에 응한다는 이름뿐인 자리였다. 군수는 일본인 내무계 주임의 감시와 견제를 받았고, 指定面이 있는 군은 일본인이 군수였다.(李基東, <일제하의 한국인 관리들>, 신동아 1985. 3. p.460) 중추원 참의는 명예직이었다.
50) 糟谷憲一, 앞의 글, p.129
51) 그라즈단제브, 앞의 책, pp.246, 254-266
52) 조선총독부 고위관리 육성증언, 앞의 책, p.345
53) 村上勝彦, 앞의 글, p.226

다. 그런데 그것에도 '차별'이 있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구별을 본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곧 한국과 일본과의 轉籍은 금지되어 있었다.[54]

한국인이 일본인으로부터 받은 가장 참기 어려운 차별은 일본인이 한국인을 열등시하면서 모멸감을 가지고 한국인을 대했다는 점이었다. 일제나 일본인이 한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주장한 한국인의 열등성은 이 절의 뒷부분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인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꺼려하였다.[55] 일제가 이웃 민족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는 1930년대에 총독이었던 宇垣一成이 1927년에 쓴 다음과 같은 일기에 잘 나타나있다.

"진정한 不羈獨立的으로 존재하는 것은 일본인 8천만뿐이다. 이 日章旗의 비호 하에 유색인종 유일의 순독립국민으로서 생존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명예이며, 자랑스러운 것으로, 어떤 부족한 점도 없는데, 조선인무리들이 이것저것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실로 不可解의 극치이다"[56]

일본은 동화주의를 云謂할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 역사가는 일본은 민족간의 평등한 관계라는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인은 민족간의 관계를 우월과 열등의 관계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脫亞入歐論에서처럼 유럽과 아시아인에 대한 이원적 사고 속에서 식민지민족을 일본민족과 분리하여 따로 통치함이 당연하다는 '分治'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프랑스와는 달리 차별통치 또는 분치가 그들한테는 자연스러운 식민지통치형태였다.[57] 矢部貞治는 1942년에 쓴 <대동아의 정치구성과 원리>에서 대동아 제민족은 각각의 가치·능력·민도·공적에 적합한 지위가 인정되고 더욱이 전체로서 유기적 조화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그것은 차별대우가 아니고 차등이 곧 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도국 독립국 보호국 직할령 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주장이었다.[58]

한국인은 열등인종으로 일제에 종속적 역할만 맡도록 되어 있어 정치적 권리도 없었고, 통치책임도 나눠 갖지 않았다. 한국인한테 진보나 계몽은 일본제국 내부에서 정해진 2등신민으로서의 지위를 일탈하지 않는 수준에 붙잡아두는 것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59]

일본인학자 矢內原忠雄은 식민정책을 종속주의 동화주의 자주주의로 구별하고, 종속주의는 식민지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식민활동을 規律하려 하는 주의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종속주의로부터 동화주의로, 또 동화주의로부터 자주주의로 옮겨간 것으로 이해하면서, 한국은 동화주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60] 일제의 동화정책은 프랑스조차 이미 19세기말에는 협동주의로 식민정책이 변화한 것과 비교해보아도 반대의 길을 간 것이었다.[61] 그런데 矢內原忠雄도 한국은 가장 전제적인 동화주의라고 지적한 바가[62]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종속주의와 동화주의의 어느 한쪽에 속한다고 보기에는 어려

54) 宮田節子, 앞의 책, p.77
55) 프랑스인은 영국인과는 달리 유색인종과의 혼혈을 주저하지 않아 아프리카흑인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되도록 했다. 인도네시아지방에서는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약했고 네덜란드인과 자바인이 결혼하여 나은 아이는 완전한 네덜란드공민권을 가졌고, 유럽인으로 분류되었다(차석기, 앞의 책, p.296, 303).
56) 宮田節子, 앞의 책, p.206에서 재인용
57) 고병익, 앞의 글, pp.752-755
58) 宮田節子, 앞의 책, p.177
59) 마크 피티, 앞의 책, p.142, 162, 169, 170, 177, 222 참조
60) 矢內原忠雄, 앞의 책, p.302-304
61) 마크 피티, 앞의 책, p.134
62) 村上勝彦, 앞의 글, p.219-220

운 점이 있다. 그래서 吉野作造는 1910년대의 한국이 일본 봉건시대 관민관계를 방불케 하는 것이 있다고 피력했고,[63] 1920년대에 矢內原忠雄는 문치주의의 총독정치 하에서 불안 절망 無光明이 떠돈다고 지적했다.[64]

프랑스의 동화정책은 대체로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하였고,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근대문화를 가진 자신들보다 이질적이고 낮은 수준의 문화를 가진 '원주민'들을 위해서 동화정책을 폈고, 그것도 통치가 캄보디아(1863) 통킹(1874) 안남(1884)과 같이 문화정도가 높은 보호령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족은 각각 특성에 따라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고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동화주의로부터 점차적으로 협동주의로 정책을 전환했는데,[65] 일제는 그들이 애용한 '同祖同根' '同族同種' '同種同文'이라는 말은 상기하지 않더라도 같은 황인종인데다 비슷한 문화를 가진 한국인을 대상으로 20세기 전반기에 동화정책을 폈고, 일제 말에는 황국신민화운동이란 극단적인 동화정책을 총력전 형태로 전개했다. 실제로 백인들은 자신의 문명과 제도를 미개민족에게 심어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고, 미신이나 이단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성스러운 일로 생각했으나, 일제는 이것에 비길만한 것이 없었다.[66] 무엇보다도 일제는 프랑스대혁명의 이념과 같은 인류보편적인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 일제나 일본인은 한국인을 차별하고 백인에 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한국인을 혐오하고 멸시했는데도 동화정책을 편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에는 프랑스가 동화정책을 편 것과 비슷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한국인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제시한 것이거나 식민지지배를 미화하기 위한 점도 있었을 터이지만, '대일본제국'을 '발전'시키는데 긴요한 지역인 한국을 '안정'된 지역으로 만들고 '대일본제국 융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기본 목적이었다. 寺內총독한테 완전한 동화란 절대복종을 의미했는데,[67] 일제한테 동화정책이란 한국인이 일제에 순응하고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다. 프랑스와는 달리[68] 또 대만과도 차이가 나게 일제 강점기 내내 무관총독만 있었던 것도, 그 무관총독을 일본천황에 직례하는 특별한 존재, 이른바 위엄있는 존재로 위치지운 것도 그 때문이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일제는 한국이 일본제국에서 결단코 떨어져나가서는 안되는 지역이지만, 강인한 민족의식을 지녔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하여 소요나 쟁란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인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 동화정책과는 모순되게 한국인을 입영시키지 않았고, 1944년에 징병제가 실시되었을 때도 독자적인 한국인부대는 없었다. 또한 영국은 동아프리카에 1개 보병대대만 주둔시켰고, 대만에는 戰間期에 보병 2개 연대와 포병부대 하나, 그리고 수개의 요새부대가 있었는데,[69] 한국 곳곳에 헌병(1919년 이전)과 경찰을 배치하였고, 서울에 조선군사령부를 설치했으며, 나남과 서울 등지에 19, 20사단을 주둔시켰다. 그렇지만 이러한 군대의 배치보다도 한국의 '안정'을 위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일제 또는 일본천황한테 순응하고 복종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동화정책이었다.

---

63) 강동진, 앞의 책, p.144
64) 矢內原忠雄, 앞의 글, pp.109-110
65) 板垣與一, 앞의 책, pp.20-21
66) 고병익, 앞의 글, pp.757-758
67) 마크 피티, 앞의 책, p.142
68) 프랑스령 식민지에는 문인정치가 이루어졌다.(차석기, 앞의 책, p.193)
69) 마크 피티, 앞의 책, p.169

일제는 한국인이 독자성을 가질 수 없는 민족이어서 어쩔 수 없이 종속적 역할을 맡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 일제나 일본천황한테 순응하고 복종하는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민족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그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고 변질시켜야 한다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믿었다. 그래서 일제는 한국의 문화나 역사, 민족성이 독립국가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일본인 관리나 교육자는 한국의 역사 풍속 사회를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한국어를 습득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지 않았으며, 그들은 한국어로 된 신문과 잡지, 라디오, 가요를 가까이 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점을[70]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고적 발굴과 관련된 조선고적조사위원회 등의 기구에 한국인을 소수밖에 끼워주지 않았고, 중추적인 역할은 맡기지 않았다. 유적 조사 발굴에도 한국인은 배제되었다.[71] 東京제국대학 등 일본의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 경성제국대학과 총독부의 여러 기구에서 활동한 일본인 학자들은 한국의 역사가 항상 종속적이었다는 것을 19세기 후반에서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은 해방 후에도 이어졌다.

한국 역사학자들이 식민사관으로 통칭하는 일제의 한국사관은 해방직후 일본 대장성에서 펴낸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에도 강조되어 있다. 이 책은 제2책 조선편 제1分册 제1장 제1절과 제2절에서 한국사에서 늘 이니셔티브를 쥔 것은 주변국가이고 한국측으로서는 이것에 여하히 순응하여 자기보전을 할 것인가에 노력이 집중되었다는 숙명적인 반도적 성격을 제시하였다. 그러한 타율성론은 제3절 <국시로서의 사대주의의 성장>에서 반복되어 강조되었다.[72] 제4절에서는 조선사회에서 대한제국기까지 한국은 누가 뭐래도 정체된 역사를 가졌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이 藤原시대 말기에 상당하다는 福田德三의 주장을 소개했다. 제5절에서는 당파성이 조선민족의 특성이라고 역설했다. 일제는 일찍이 일본인한테 역사교과서 등을 통해 神功황후의 '삼한정벌'을 비중있게 가르쳤던 바, 한 일본인 연구자는 일본에서 '삼한정벌' 전승은 幕末이래 어떤 의미로는 忠信藏 이상으로 친숙하고 일상생활 중에 박혀 있다고 기술했다.[73] 일본인 역사학자 旗田巍는 일본은 한국의 나라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까지도 빼앗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한국인을 손상시켰는가는 우리들 일본인에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바가 있다고 피력한 바 있지만,[74] 해방 후 한국인 역사학자들이 가장 힘들여 한 일중에 하나가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으로 대표되는 일제의 식민사관을 연구하고 비판하는 작업이었다.[75]

---

70) 일본 대장성 관리국, 앞의 책 2, pp.30-31. 프랑스는 안남인의 종교 관습 전통을 바르게 존중하고, 그들의 기질에 잘 맞는 전통적 지방행정조직을 활용함으로써 현지인의 관습과 자주성을 파괴한 동화정책의 폐해를 고치려고 노력했다.(板垣與一, 앞의 책, p.21) 1924년 및 1936년에 인도차이나에서 현지어가 공용어로 정해지고부터는 현지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프랑스인은 관리에 임명된다든지 승진을 하지 못했다.(차석기, 앞의 책, p.184)

71) 최석영, 앞의 책, p.187, 272, 283

72) 경성제국대학총장 山田은 1930년대 중반 경성제대에 '국사상 조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 중등학교 교원 중에 한일병합이 설명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데는 먼저 한국이 한번도 독립국가이었던 사실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진희, 앞의 글, pp.694-695)

73) 磯田一雄, <황국의 모습을 좇아> ≪교과서로 본 식민지교육문화사≫, 일본 皓星社, 1999, pp.169-175

74) 旗田巍, ≪일본인의 한국관≫, 李基東역, 一潮閣, p.171

75) 金容燮, <일본·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사서술>, 역사학보 31, 李基白, ≪민족과 역사≫, 일조각,

일제는 한국인의 민족성이 독립에 부적당하며, 한국인은 열등민족이라는 것을 여러 형태로 주장하고 그것을 보급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1920년대 문화통치기 정치선전으로 주장된 독립불능론은 민족성이 독립자치능력이 없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며, 독립하려고 해도 실력이 없고, 국제적 조건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20집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에는 1) 방종 사치 낭비 사행심, 2) 표면적 형식적, 3) 부화뇌동 등 한국인의 민족적 결함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조사자료에는 자살이 적은 것도, 자살이 많은 것도 한국인의 열악한 민족성으로 되어 있다. 高橋亨는 ≪조선인≫ (조선총독부 발행)에서 사상의 고착이나 종속 등 한국인의 숙명적 특성을 기술했다.[76]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 久保는 강의시간에 한국인은 해부학 상으로 야만에 가깝다고 말해 1개월간 동맹휴학 등 분규를 야기 시켰다.[77] 槐山공립보통학교, 목포상업전수학교에서는 교장이 "조선인은 米虫이다" "鮮人은 부패한 식물을 食한다"라고 말해 역시 분규가 일어났던 바, 신문에서는 제2의 久保사건으로 기사화했다.[78]"조선은 전혀 우리 平安朝로부터 현재까지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거대한 축도"라고 지적한 喜田貞吉는 서울 남산공원에서 삼삼오오 소요하고 있는 한국인을 보고 한국인은 怠業的 민족이라고 규정했다.[79] 백인이 하면 훌륭해 보이는 것도 한국인이 하면 열등의 증표여서, 지하의 냉수도 한국인이 마시면 미개인이라고 조소를 받았고, 서양인이 唱導하면 문명의 新法같이 일본인한테 推重되었다.[80]

旗田巍는 일제가 역설한 동화나 일시동인은 한국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것을 부정하여 한국을 몽땅 일본에 흡수시킴으로써 양자의 대립·차별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의식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一切 박탈함으로써 一體가 된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방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한국인의 전통적인 풍속, 습관, 언어의 무시, 한국인의 민족의식·민족운동의 부정, 일본식 풍습이나 일본어의 강요, 신사 참배 등의 일본인 儀式의 강제 등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81] 앞에서 필자는 동화정책이란 한국인을 일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했지만, 이와 같이 동화정책은 한국인의 역사나 문화, 민족의식을 왜곡하고 제거하여 독립할 생각을 갖지 못하고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동화정책이 형태나 성격을 달리하면서도 일제강점기에 지속적으로 추구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동화정책은 한국인을 자아를 상실한 불구적 존재로 만드는 비인간화의 정책이었다.

1974, 이기백, ≪한국사학의 방향≫, 일조각, 1978, 李萬烈, ≪한국근대역사학의 이해≫, 문학과지성사, 1981, 趙東杰,,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3 등 참조

76) 강동진, ≪일본의 조선지배정책사연구≫, p.42

7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3, 1977, pp.359-393

78) 위의 책 13, pp.610, 922-923

79) 喜田貞吉, <庚申(1920)鮮滿旅行日誌>, ≪민족과 역사≫ 제6권 제1호, pp.259-260

80) 조선일보 1931. 6. 5.

81) 旗田巍, 앞의 책, p.6

4. 동화교육

동화교육의 진면목은 조선총독부 최초의 조선교육령(1911. 8.)에서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는 것과 초등학교에서부터 경찰이나 헌병을 연상시키게 관복을 입고 허리에 칼을 찬 교사가 朝鮮語及漢文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어로 교수했다는 점에[82] 잘 드러나 있다. 대만의 경우 ‘충량한 신민’ 대신 德敎로 교육했던 것과[83] 대비를 이루는데, 寺內총독의 의도하는 바가 잘 드러나 있다. 그것은 식민지라고 하더라도 대개 초등교육은 현지어로 가르치기 마련인데 일본어로 가르쳤고,[84] 그것도 관복을 입고 칼을 차고 가르치게 한 것이다. 1920년에 한 한국어 신문은 일본어로 가르치는 것을 ‘동화정책의 골수’라고 표현했는데,[85] 전혀 일본어를 모르는 학생들은 상당기간 학업 진도가 나갈 수 없었다.[86] 조선총독부의 學務당국자는 전혀 일본어를 모르는 아동들에게 통역 교수하는 것을 배제하고 일본어로 敎授하기 위해 ‘국어교수의 법칙’을 안출하였던바. 보통학교 교실용어는 3개월에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87]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일본어로 교수를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교육에 각별히 비중을 두어 가르쳤다. 교육령 제5조는 “보통교육은 특히 국민의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보급을 목적으로 함”으로 되어 있는데,[88] 국어보급이 ‘국민 성격’ 함양에 중요하였기 때문이었다. 6년제 보통학교의 경우 1학년에서 6학년에 걸친 總時數가 한 주에 국어 곧 일본어가 64시간이었는데, 朝鮮語及漢文은 20시간밖에 안되었다. 고등보통학교는 1922년의 경우 5년간의 총시수가 日本語及漢文 32시간, 朝鮮語及漢文 12시간이었다. 그리하여 전체 교육시간 중 초등학교에서는 일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1906년에 20.7%에서, 1911년 37.7%, 1922년 39.3%, 1938년 35.0%가 되었는데, 조선어는 각각 20.7%, 20.8%, 12.5%, 6.5%였으며, 1941년에는 0%였다. 중등학교의 경우는 일본어가 각각 20.6%, 25.0%, 20.0%, 17.3%였으며, 조선어는 각각 21.7%, 11.7%, 7.5%, 4.0%였으며, 1941년에는 역시 0%가 되었다.[89] 이처럼 일본어 교육이 조선어 교육보다 월등 비중이 컸을 뿐만 아니라, 조선어 또는 조선어 및 한문의 교육 내용은 일제의 시책 및 일본문화와 관련되는 것 등을 택하고, 교수방법도 일본어 교수방법에 준하거나 일본어와 연락 유지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

82) 孫仁銖, ≪한국교육사≫ 2, 文音社, 1995, p.629
83) 磯田一雄, <皇民化敎育과 植民地의 國史敎科書> ≪近代日本과 植民地 - 統合과 支配의 論理≫ 4, 岩波書店, 1993, p.122
84) 인도의 경우 1854년 교육법에서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영어를 강의용어로 사용하게 했지만, 국민대중에게는 현지어로 가르치게 했다.(조길태, 앞의 책, p.373)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총독은 1917년에 교수용어로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것을 지방공공단체에서는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지어에 의한 교육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1924년에 총독은 실제적인 이유에서 초등학교 3년 교수에는 현지어로 해야 한다고 훈령을 내렸다.(차석기, 앞의 책, pp.183-184). 인도네시아지방의 경우 현지어를 사용하는 공립 보통학교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공립 보통학교보다 월등 많았다.(위의 책, p.296)
85) 동아일보 1920. 4. 13. 사설 <조선인의 교육용어를 일본어로 강제함을 폐지하라>
86) 한성고등학교에 다니던 한글학자 이희승은 합병되면서 갑자기 일본어로 배우게 되어 성적이 나빴고, 그래서 선생한테 미움을 받아 얼마 후 자퇴했다고 회고했다.(이희승, 앞의 글, pp.69-70)
87) 일본 대장성 관리국, 앞의 책 2, pp.42-43
88) 일본 대장성 관리국, 앞의 책 2, pp.42-43
89) 劉奉鎬, ≪韓國敎育課程史硏究≫, 敎學硏究社, 1992, pp.134-195, 274

본어로 교수하였다.[90] 중등학교에서 조선어교육이 외국어교육보다도 월등 적은 것도 눈에 띈다. 1922년의 경우 고등보통학교에서 조선어 및 한문은 1-5학년까지 1주일에 12시간이 배정되었는데, 외국어는 30시간이었고, 1931년에는 각각 12시간, 28시간이었다.[91] 일제는 일본어를 가정 및 사회에 보급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1912년부터 공사립학교 중심으로 경찰관 지방관리 독지가 사이에 국어강습회가 열렸다. 서당에서도 1919년에 천수백개소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도록 했다.[92]

일본식 동화교육의 또 하나의 특성은 한국인과 일본인을 분리해서 가르쳤던 것에 잘 나타난다. 초등학교 입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의 경우도 민족적인 편견이 적어서 일단 우정이 맺어지면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인격형성적인 시기에 분리되어 교육을 받은 것이다.[93] 일본인과 한국인은 다니는 학교의 명칭도 달랐고 교육 연한도 달랐다.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는 초등학교는 소학교, 중등학교는 중학교라고 불렀는데, 한국인은 초등학교는 보통학교, 중등학교는 고등보통학교라고 하여 격을 한 단계 떨어뜨렸다. 그리고 교육연한이 소학교는 6년, 중학교는 5년 고등여학교도 5년이었는데, 한국인 학교의 경우 통감부시기보다도 감축하여 보통학교는 3-4년, 고등보통학교는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이었다. 이와 같이 분리해서 가르치고 명칭도 다르고 교육연한도 다른 것은 교육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다. 대구공립보통학교장 花田金之助는 소학교는 조선인을 지도할만한 자질과 품성을 아동기부터 길러주고, 보통학교는 황은의 지극함을 강조하면서 국어의 보급과 덕성의 함양에 노력하여 제국신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고 말했는데,[94] 솔직히 소학교와 보통학교의 차이를 털어놓은 것일 것이다. 교육연한은 1922년 제2차 교육령에서 차별을 철폐하도록 했는데,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경우 4년 또는 5년이었고,[95] 지방 보통학교는 상당수가 4년만 가르쳤다.[96] 현지주민과 이주일본인을 공학하게 한 것은 대만은 1922년이었지만, 한국은 황국신민화운동이 벌어진 1938년에 와서였고,[97] 그것도 주로 신설학교에 적용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 일본인 아동 한 명에 대해서는 49원을 지출했는데, 한국인은 18원이었다.[98]

일제는 동화정책을 강조했으면서도 한국인은 되도록이면 교육을 적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寺內총독은 한국인교육은 충량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목적 달성 외에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학교 보급에 열의가 없었던 것도[99] 하나의 이유였겠지만, 초등학교도 아주 적었다. 그러나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는 더욱 적어 1918년 5월 현재 관공립 고등보통학교가 4개교, 여자고등보통학교가 2개교에 지나지 않았다.[100] 일제는 이미 통감부가 설치된 해인

90) 鄭在哲, ≪일제의 對한국식민지 교육정책사≫, 일지사, 1985, p.362
91) 유봉호, 앞의 책, pp.174-175, 195
92) 일본 대장성 관리국, 앞의 책 2, p.42-43
93) 그라즈단제브, 앞의 책, p.270
94) 권태억, <1910년대 일제의 '조선'동화정책>,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2년 11월 1일 발표, p.12,
95) 손인수, 앞의 책, p.636
96) 吳天錫, ≪韓國新敎育史≫,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p.282
97) 정재철, 앞의 책, p.126
98) 그라즈단제브, 앞의 책, p.270
99) 森山茂德, <일본의 조선통치정책(1910-1945)의 정치사적 연구>, 法政理論 23-3·4, 1991, pp.72-73
100) 권태억, 앞의 글, p.9

1906년에 관립 외국어학교인 育英公院 등을 폐지했고, 1911년에는 1895년에 세워진 한성사범학교를 폐지했다. 또 숭실학교의 大學科 이화학당의 대학과도 인가취소했다. 사립학교인 경우 강점 초기에는 전문학교 인가도 소수로 제한하였다.[101] 한 교육학자는 일제 식민지교육정책은 문맹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102] 한국인을 열등한 수준에 묶어두기 위해 초등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았고, 고등교육기관은 없다시피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과는 비교하지 않더라도 중국만해도 북경 상해 남경 천진 청도 제남 봉천 등에 하나 또는 여러 대학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한국은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설치되고 26년에 본과가 설치되었을 뿐이고,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더 이상 대학이 존재하지 않았다. 유일한 대학인 경성제대도 일본인 학생이 훨씬 더 많아 예과는 1924-38년에 한국인이 33.5%밖에 안 되었으며, 법문학부는 1926-38년에 39.7%, 의학부는 같은 기간에 26.5%였다. 관립 전문학교도 비슷하여 1937년에 한국인 635명, 일본인 1,222명이었고, 1943년에 한국인 802명, 일본인 2,231명이었다.[103] 한국인의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확대된 193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한 인구 천명당 한국인 학생수(1939년 기준), 한국거주 일본인 학생수(1939년 기준), 일본거주 일본인 학생수(1936년 기준)를 보면, 각각 초등학교는 55.2, 142.8, 164.5였고, 중등학교는 1.31, 32.7, 17.9였으며, 대학은 0.0093, 1.06, 1.03이었다.[104] 조선총독부는 또한 한국인이 공리공론을 떠나 분수를 지키게 하기 위해 실용주의 교육, 곧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105] 종순하고 규율에 잘 따르는 순응적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한국인의 교육 기회는 매우 낮았다. 吉野作造는 1919년 6월에 한국 전체의 초등학교수가 일본의 최소 縣보다도 적고, 중등과정인 고등보통학교가 남녀학교 합해서 4-5개밖에 안되고, 고등보통학교와 초등학교의 교육이 합해서 8년이어서 일본의 고등소학교 졸업년한과 같다는 것에 주목했다.[106] 한국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1911년 1.7%, 1919년 3.9%, 1929년 18.6%, 1937년 30.8%, 1942년 54.5%였다. 일본은 1874년에 32.3%, 1894년에 61.7%, 1911년에 98.1%였다.[107] 대만도 1926년에 28.4%, 1935년 42%, 1940년 57.6%로[108] 한국보다 높다. 중등과정의 경우 한국인이 다니는 고등보통학교 학생수가 한국인의 30분의 1에서 40분의 1밖에 안되는 在韓일본인의 중학생수와 비슷했다.[109]

한국인은 조선총독부 고위관리도 인정한 바와 같이 교육 기회 확대를 열망했다.[110] 그러나 일

---

101) 정재철, 앞의 책, pp.326, 335-337
102) 손인수, 앞의 책, p.622
103) 정재철, 앞의 책, pp.396-397, 459
104) 그라즈단제브, 앞의 책, p.268
105) 韓基彦, <일제의 동화정책과 한민족의 교육적 저항> ≪일제의 문화침탈사≫ ; 民音社, 1982, pp.9-10, 18 ; 손인수, 앞의 책, p.632
106) 일본 대장성 관리국, 앞의 책 2, p.13
107)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pp.78-79
108) 鄭在哲, 앞의 책, p.133
109) 중등과정(중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수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1911년에 각각 830명, 864명, 1922년에 7,691명, 6,446명, 1938년에 24,473명, 20,010명, 1943년에 44,448명, 28,643명이었다.(일본 대장성 관리국, 앞의 책 2, p.39) 재일 일본인은 1910년에 한국인의 1.3%, 1940년에 3.0%였다.(서중석, 앞의 책, p.79)
110)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었던 田中武雄은 "조선인이 조선통치에서 가장 요망한 것중 하나가 교육을 좀더 보급시켜달라, 교육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인의 근본적인 요망이다....그것이 안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조선 인텔리 민족주의자들의 철저한 사고방식....(일부 일본인은) 독립

제는 사립학교까지도 제한을 가해 사립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도 축소시켰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에 사립학교령을 개정한 것에 이어 1915년 사립학교규칙을 대폭 개정하여 일본어로 교수를 하게 하는 등 많은 제한을 두었던 바,[111] 사립학교가 1910년에 1,973교였던 것이, 1919년에 742교, 1925년 604교, 1935년 406교로 줄었다.[112] 일제는 서당조차 1918년에 서당규칙을 발포하여 감독을 엄하게 하는 등 제한을 가했다. 그리하여 1919년에 23,556명이던 학생이 1935년에 6,807명으로 대폭 줄었다.[113] 교원도 중등학교 이상은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 1935년 5월말 현재 일본인교원은 관공립보통학교 32.4%, 공립고등보통학교 85%, 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74%, 사범학교 85%, 관공립전문학교 88%, 대학 100%이었다.[114] 사립학교에도 일본인 교원이 많았는데,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의 경우 1927년에 22명 교원 중 한국인은 5명만 남았고, 조선의복 재봉교원 기숙사사감까지도 일본인을 임명해 학생들은 "재봉교원은 반드시 조선인 교원으로 할 事, 조선인 교원을 다수 증가할 사"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한달 이상 동맹휴학에 들어갔다.[115]

'忠良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 일제는 역사교육을 중시했다.[116] 강점 초기에는 역사교육을 통한 동화교육이 아니라, 한국인을 역사교육으로부터 소외시키려는 통감부시기의 정책을 발전시켰던바, 보통학교 교과목에서 지리역사가 사라졌다. 그러면서도 국어(일본어)독본 교재에는 일본의 역사지리를 취급했다. 한국역사는 朝鮮語及漢文에도 없었다.[117] 1921, 22년에 채택된 ≪普通學校國史≫ 상·하(國定 제3기 역사교과서)는 ≪尋常小學日本歷史≫ 본문에 朝鮮事歷을 補充敎材 別項目으로 삽입한 것으로, 일본사 부분은 내용도 문체도 일본의 국정 ≪일본역사≫와 전혀 동일했고, 한국역사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일제의 강점을 합리화하는 내용이었다. 역사와 문화, 언어를 달리하는 한국아동들한테 일본에서의 교육과 똑같은 내용의 역사를 가르친 것인데. 문체도 일본 어린이들한테도 난해한 문어체였다.[118] 한국인들은 한국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본의 역사, 전설, 풍속, 人情, 문화를 아동의 뇌수에 고취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한국의 역사 지리 과목을 설치해주고 보통학교 교원은 한국인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119]

사상을 양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경성제국대학을 창설할 때에도 심한 반대가 있었읍니다"라고 회고했다.(조선총독부 고위관리의 육성증언, 앞의 책, p.152)

111) 오천석, 앞의 책, pp.261-262

112) 위의 책, pp.261-262 ; 정재철, 앞의 책, pp.350-351

113) 정재철, 앞의 책, pp.350-351 ; 동아일보 1920. 4. 21. 사설, <조선교육에 대하여>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12, p.622

114) 정재철, 앞의 책, pp.350-351

11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13, pp.422-423

116)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1915년에 주도한 ≪半島史≫의 편찬 목적도 "민심 薰育을 통하여 조선인을 충량한 제국신민으로 만들어 조선인 동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조동걸, <식민사학의 성립과 심화> ≪한국독립운동사 5 -일제의 식민통치≫, p.347)

117) 磯田一雄, <황민화교육과 식민지의 국사교과서>, p.116. 이 시기에는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도 한국의 역사지리를 가르치지 않았다.(유봉호, 앞의 책, pp.136-142)

118) '국사'란 명칭도 일본보다 한국이 약간 빨랐다.(磯田一雄, <황국의 모습을 좇아>, pp.197-198)1922년 대만 초등학교교육에 일본역사 지리가 도입되었을 때에 그 교과서는 조선총독부의 국사(곧 일본사)와 큰 차이가 있었다. 문체도 평이한 경어체였다.(磯田一雄, <황민화교육과 식민지의 국사교과서>, p.123)

119) 동아일보 1920. 4. 22. 사설<조선교육에 대하여>3, 1920. 7. 14. 사설 <보통학교는 무엇을 하는 것이나>, 1921. 3. 3. 사설<역사교육에 대하여>(속) 등 참조(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12, pp.627, 653, 674-675). 한국인 어린이는 정서에 영향력이 큰 한국창가도 가르치지 않았다. 1922년에

5. 황국신민화운동・황국신민화교육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도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벌어진 황국신민화운동은 전체주의적 동원의 방식으로 한국인한테 황국신민 되기를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동화정책과 차이를 갖는다. 내선일체를 주창한 조선총독 南次郎은 내선일체란 “반도사람을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피력했는데,[120] 사회건 학교에서건 총력전으로 명실공히 완전한 황국신민화를 꾀해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해체하고 일본인처럼 천황에 절대 복종하는 인간형을 주조해내기 위해서였다. 황국신민화운동은 천황제 파시즘 또는 군국주의 파시즘에 순응하는 인간만들기운동으로 히틀러의 나찌즘이나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비슷한 비인간적 반문명적 운동이었다. 이와 같은 운동이 전체주의적 동원방식으로 전개된 것은 한국인의 민족의식, 독립의식을 말살시켜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데 인적 물질적 兵站기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였다.[121] 이로써 한국인의 인권은 참혹하게 짓밟혔고, 한국인의 인간의식은 비상한 위기를 맞았다.

중일전쟁 도발직후인 1937년 7월 22일에 조선총독부는 조선중앙정보위원회를 설치했던바, 매월 1일을 애국일로 제정해 모든 직장 학교 마을에서 神社・神祠참배를 강요하고[122] 국기게양 등의 행사를 벌였고,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정했으며, 국방헌금을 받았고, 전승축하 행사 등을 벌였다.[123] 이 애국일은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뒤 大詔奉戴日(매월 8일)로 바뀌었는데, 매일 일본천황이 있는 궁성을 향해 절을 하게 하는 宮城遙拜와 正午默禱를 강요했다. 1937년 10월부터 한국인은 대만인에게는 요구하지 않은, “1.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 2. 우리는 마음을 합쳐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한다. 3. 우리는 忍苦鍛鍊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된다”로 되어 있는 황국신민의 誓詞를 낭송해야 했다. 매년 11월 10일을 중심으로 해서는 ‘국민정신 作興주간’이 설정되었다.

중국침략전쟁 1주년을 맞아 조선총독부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조직했다. 이 단체는 1940년에 農山漁村진흥운동을 포섭하여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町・洞・里부락연맹과 각종 연맹 아래 약 10戶를 단위로 하여 애국반을 편성해 한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황국신민화운동과 침략전쟁 찬양운동을 폈다.[124] 황국신민화운동은 이밖에도 여러 형태로 전개

전남 영암보통학교 학생들은 한국의 창가와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에 항의하고 동맹휴학에 들어갔다.(동아일보 1922. 9. 2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12, p.966)

120) 宮田節子, 앞의 책, p.161

121) 鄭在哲, 앞의 책, p.400 참조. 일제 관학자 鈴木武雄는 대륙병참기지론은 내선일체론과 같은 것이며, 내선일체론이 특히 정신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대륙병참기지론은 특히 물적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宮田節子, 앞의 책, p.161)

122) 1936년 8월 신사증설방침을 세운 이후 1944년 5월 현재 주요 도시에 60여개의 정규 神社가 건립되고, 939개소에 일반 경배의 神祠가 세워졌으며, 학교 관공서 등에는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를 모시는 구내 타이마뎅[大麻殿]을 설립케 하고 각 가정에는 카미다나[神棚]를 모셔놓고 조석으로 경배하게 했다.(金大商, ≪일제하 강제인력수탈사≫, 正音社,, 1975, p.30)

123) 君島和彦, <조선에 있어서 전쟁동원체제의 전개과정> ≪일제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출판사, 1988, pp.173-175

124)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지방조직은 지방행정과 표리일체를 이루었다. 회사, 은행, 공장, 광산, 큰 상점,

되었다. 1937년 8월에는 고대 일본의 武道정신을 체현시켰다는 '황국신민체조'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해 12월에는 한국인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일본천황의 '眞影'을 '奉安'케 했다. 이해에는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로 학도근로보국대를 조직했다. 이러한 행태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조선총독부는 1940년 2월부터 한국인이 오랫동안 가져왔고 중시했던 姓까지 성격과 의미가 다른 일본인의 씨로 바꾸게 하여 천황주의적 가족국가관을 강요하는 創氏改名이 행해졌다. 창씨개명은 군인들의 외고집으로 강력히 추진되었던바, 극히 단순하고 완고하게 서둘러 행해졌다.[125]

황국신민화운동에서 특히 중시한 것이 '국어'보급이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보급은 강점 초기인 1912년부터 국어강습회 등을 통해 있었는데, 1930년대에 宇垣총독은 농촌진흥운동에서 특히 국어보급에 힘을 쏟았다. 1937년에 '국어상용'운동은 한층 강화되었다. 1938년 제2차 조선교육령 개정에서 조선어과목은 수의과목이 되어 사실상 폐지되었고 고등보통학교에서도 조선식 한문이 폐지되었다. 1939년 조선문인협회(1942년 타단체 합쳐 조선문인보국회가 됨)는 '국어'로 작품쓰기운동을 벌였고, 연극에도 1943년부터 1막은 반드시 '국어극'으로 상연토록 했다.[126] 이해에는 國民皆唱운동이 벌어졌다. 영화는 1942년부터 '국어'를 사용토록 했다. 한국어의 일본어 해득률은, 공교육을 적게 받은 것이 한 요인이었지만, 1930년대까지는 대단히 낮았다. 낮은 수준의 일본어 해득자(稍解者)가 1913년 0.6%, 1922년 1.2%였고, 1937년에도 11.1%였다. 그러나 1942년에는 19.9%로 증가했다.[127] 대만의 경우 일본어습득자는 1933년에 24.5%, 1940년에 53.9%였다.[128] 일제 말에 한국인 어린이들은 교육받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 학교생활에서도 일본어쓰기를 강요당하고 어기면 벌을 받았다.[129]

황민화운동이란 다름 아닌 군국주의적 파시즘적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운동이었지만 한국인과 일본인의 경우는 크게 다른 점이 있었다. 일본인은 전통과 문화, 정치적 성격으로 그러한 운동을 받아들이는데 순응하게 되어 있었지만, 한국인한테 천황이데올로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의 강요는 한국인의 문화와 역사, 한국인이라는 민족의식을 말살하는 행위와 표리의 관계에 있었다. 이 점에서 한국인이 입은 상처는 심대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일본천황의 충량한 신민을 만들기 위한 황국신민화운동과 동

그밖에 관공서 학교 등에 빠짐없이 國民總力職域연맹이 만들어졌고, 도의 앙양, 황민 鍊成, 결전생활 확립, 필승 생산력의 확충(공출, 식량증산, 상공광업봉사대 결성, 농촌중견청년으로 農報청년대 조직), 징병제도 실시의 준비, 銃後奉公맹세 등의 활동을 했다.(일본 대장성 관리국, 앞의 책 2, pp.118-122) 1945년 6월 조선총독부와 제17방면군사령부는 義勇병역법에 의거하여 국민총력조선연맹을 폐지하고 15-60세의 남자, 17-40세의 여자로서 국민의용대를 조직하여 '국민항전'을 꾀했다.(정하명, <일제의 군사정책> ≪한민족독립운동사 5 - 일제의 식민통치≫, pp.170-172

125) 조선총독부고위관리 육성증언, 앞의 책, p.276(조선총독부 총무국 문서과장 山名酒喜夫증언)

126) 연극배우 白星姬는 무대 맨앞자리에는 일본도를 찬 순사들이 앉아 검열을 하여 빼라고 한 부분이 들어가면 상연을 중지시켰는데, 나중에는 숫제 우리말로 연극을 못하게 했다고 회고했다.(백성희, <국립극장의 귀신이 되려나> ≪털어놓고 하는 말≫, pp.138-139) 이화여전 학생들도 부민관에서 졸업반 연극을 일본어로 해야 했다.(이희승, <불우한 시절의 우정> ≪나의 交友錄≫, 중앙일보 동양방송 1977, p.250)

127) 일본 대장성 관리국, 앞의 책 2, pp.42-48

128) 정재철, 앞의 책, p.132

129) 일제 말에는 한국인가정에서도 일본어 상용을 강요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에 살고 있었다.

아시아침략전쟁을 찬양, 미화하는 데는 한국의 유지 명사, 기독교 천도교 불교 유림 등의 종교계 지도자들, 문인, 지식인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었다. 이로써 민족분열현상은 한층 심각해졌다.

명사 유지들이 대거 황민화운동과 침략전쟁에 동원되었다면, 사회주의자들이 다수인 '主義者'들은 혹독하게 사상의 굴절 또는 전향을 강요받았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대적으로 '전향'이 강요되었고, 1936년에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 공포되어 7개소에 보호관찰소가 생겨났다. 다음해에는 大和塾 등을 만들어 사상범을 무조건 가입하게 하여 감시했다. 같은 해에는 사상전향자로 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을 결성했다. 1937년 9월부터는 일선 경찰관을 동원한 시국좌담회가 열렸는데, 1940년 1월까지 30만9천회에 1,606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발표되었다.[130]1938년에는 공산주의사상을 박멸하고 일본정신을 앙양하기 위해 조선방공협회를 만들었고(총재 정무총감), 그 아래에 250개소에 지부를, 지역 또는 공장 직장 등에 1,789개소의 防共團을 두었다. 일제는 '금일'의 세계를 방공국가군과 용공국가군으로 양분하고, 東京-베를린-로마를 주축으로 공산주의 격멸의 巨火를 들고 인류구제의 大道에 驀進하자고 외쳤다.[131]

왜 일제는 한국에서 극단적인 황국신민화운동을 벌였을까. 중일전쟁 이후 부족한 노무자들을 한국에서 징발하기 위한 것이 중요 이유의 하나였다. 일본은 이 시기에 한국인의 일본도항 제한을 바꿔 적극적으로 일본입국을 받아들였던바, 1939년 9월 이후는 '모집'의 형태로, 1942년 2월 이후에는 '관알선'의 형태로 일본에 데려가거나 끌고 갔다. 한편 1939년 7월 발포된 국민징용령에 의해 1941년 9월 이후 육해군요원이 징발되었고, 1944년 2월부터는 공장과 광산 등에도 징용으로 끌고 갔다. '모집'이건 '관알선'이건 '징용'이건 도망자가 속출하여 일본 내무성 경보국의 자료에 의하면 1941년의 경우 43,031명으로 집계되었다.[132] 일본 九州의 山田광산의 경우 도망률이 1942년 67%, 1943년 42%, 1944년 44%였다.[133] 이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들은 군대식으로 조직되고 통제되었다. 일본에 강제연행된 노동자들을 최대한 부려먹기 위해서도, 빈발하는 도망을 막기 위해서도 한국인들을 철저히 황국신민으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다. 노동자로 부려먹기 위해서는 일본어 습득이 중요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 연구자는 1939년 이후 강제징발자는 한반도내에서의 노역종사자 480만 명, 일본본토로의 강제연행 152만 명, 軍屬(軍勤務者) 20-30만 명, 군인 23만 명, 일본군성노예 14만 명 등 약 699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것은 해방직전 한국인 인구 25,763,341명의 29%가 되는 숫자다.[134]

황국신민화운동은 일제의 전반적인 천황제 파시즘화 과정에서 일어났지만, 15년 전쟁, 특히 중일전쟁 이후의 전쟁과 관계가 크다. 일제는 프랑스와는 달리[135] 한국인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

130) 細川嘉六, 앞의 책, p.330
131)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 ≪高等外事月報≫, 제2호, (1939년 8월분) p.86
132) 海野福壽, <조선의 노무동원> ≪근대일본과 식민지 5-팽창하는 帝國의 人流≫, 일본 岩波書店, 1993, pp.104-109
133) 한국인은 위험한 갱내 작업에 배정이 많이 되어 한 통계에는 부상자가 일본인보다 3.6배 많은 것으로 나와있다.(李均永, <일제종말기(1937-1945)의 병참기지정책> ≪한민족독립운동사 5-일제의 식민통치≫, pp.148-149)
134) 강경구, <전시하 일제의 농촌노동력 수탈정책> ≪일제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출판사, 1988, p.88. 일본에 끌려간 노동자의 숫자에 대한 자료의 차이에 대해서는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하, 일본 青木書店, 1973, p.33, 海野福壽, 앞의 글, pp.108-122 참조. 일제 말 한국인은 유태인 등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국외유출 비율이 높은 민족에 속했다.
135) 제1차 세계대전중 845,000명의 프랑스식민지 출신 병사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다. 1934년 프

지 알 수 없어 징병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렇지만 전쟁의 확대는 2천만이 넘는 인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136]鮮滿一如를 제창했고, 황국신민화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인 조선총독 南次郞은 '내선일체'의 최후목표는 ''완전한 황민화'에 있고, 그것은 아무런 사심없이 일본 천황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조선인 병사의 출현에 연관되는 문제임을 피력했는데,[137] 이제 한국은 내외정책상 일제와 일체가 되지 않으면 국가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138] 그런데 일제 내무성이 제2차 세계대전을 벌인 1941년 12월 8일부터 22일 사이에 일본 거주 한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들과의 통신문을 조사한 결과 "거의 자기의 현황이 위험, 초조하다고 쓴 것뿐으로 시국에 대한 인식을 앙양하는 것은 없다"라고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징병제를 시행하고 전쟁체제를 구축하려면 황국신민화운동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139] 1940년 2월 창씨개명 시행에도 군부의 입김이 작용했지만, 1942년 1월에 이르면 외지민족을 병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초미의 급무가 아닐 수 없다고 일제 육군성은 판단했다.[140]

일제는 징병제 실시의 전단계로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을 발포하여 그해부터 지원병을 모집했다. 지원병 자격으로 가장 중시한 것이 '사상의 견고'였고, '주의자'를 극도로 경계했다는 것은[141] 군대와 황국신민화운동과의 관계를 적절히 말해준다고 하겠다. 지원병은 1938년에 406명이 입소하였는데 해마다 증가하여 1943년에는 6,300명에 이르러 총 17,644명이었으며, 1943년 5월 해군특별지원명령에 의해 3,000명이 입소했다.[142] 당국은 지원자수 할당을 늘리도록 강제하였고, 그것을 황국신민화의 척도로 선전했다. 지원병합격자는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8,9할이 소작농이었고, 그 외에 약간의 사무원, 관공리를 제외하면 급사 傭人 등이었다. 지원병과 관련해 조선군사령부는 兵員자원 보충보다 한국인 전체에 대한 황민화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했고, 단기 在營者들은 제대 후 국민총력연맹 애국반의 추진대원 등이 되어 군사교육에서 체득한 정신을 황민화운동 추진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143] 일제는 1943년 10월 학도특별지원병제를 결정하여 1944년 1월 국내 재학생 959명, 귀성 중이던 유학생 1,431명, 일본 재학생 719명, 졸업생 1,276명 등 4,385명을 입영시켰다.[144] 그와 함께 일제는 중등학교 이상에 현역장교를 배속시켜 군사훈련을 하고, 초등학교 졸업생은 청년훈련소, 일본어에 약한 초등학교 미수료자는 청년특별연성소에 집어넣었는데, 특히 후자한테는 '국체의 본의'를 밝히고 '헌신보국'의 정신을 기르고 '국어'를 습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145]

랑스군대의 3분의 2는 식민지 출신 병사였다. 이들 병사들은 프랑스에 충성을 다했고, 연합군 참전의 大義에 동조했다.(차석기. 앞의 책, p.193)

136) 1945년 3월 일제 내무성의 한 극비문서에는 대동아공영권안에서 대륙을 향한 교두보인 조선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원료 공급지로서의 경제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근간은 풍부하고도 증식력이 큰 인구라고 쓰여 있다.(宮田節子, 앞의 책, p.183) 1945년이어서 더욱 인력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것이다.

137) 宮田節子, 앞의 책, p.164

138) 조선총독부 고위관리 육성증언, 앞의 책, p.284(山名酒喜夫 증언)

139) 宮田節子, 앞의 책, p.130, 164

140) 위의 책, pp.133-134

141) 위의 책, p.38

142) 박경식, <태평양전쟁기 한국인 강제연행> ≪일제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출판사, 1988, p.65.

143) 宮田節子, <조선에서의 지원병제도의 전개와 그 의의> ≪조선역사논집≫ 하, 일본 龍溪書舍, 1979, pp.421-432

144) 李祥雨, <건군 40년, 한국의 군부>상, 신동아 1988. 10. p.355

1944년부터 일본정부의 요청에 따라[146] 징병제가 실시되어 그해 9월부터 입대를 해, 육군으로 186,980명, 해군 22,290명 등 209,270명이 끌려갔다.[147] 일제는 징병제 실시를 앞두고 1940년 8월 의무교육제 실시준비 개시를 발표했고, 1945년 12월에 1946년도부터 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148] 의무교육의 추진은 징병제와 관련이 있었다.[149] 군대는 일본어만 쓰게 되어 있었고, 한국어는 방첩 상 절대 금지했고, 부형과의 통신도 일본어로만 하게 했다.[150] 그런데 1944년에 징병검사를 받은 한국인 장정조차 46%정도가 미취학자로 일본어를 몰랐다. 징병적령자연성소에서는 연성시간 600시간 중 400시간을 일본어 강습에 할애했다.[151] 징병제 실시, 戰局의 악화, 연합국의 카이로선언 등에 영향을 받아 한국인의 참정권문제도 검토되었다. 이 참정권은 군부와 조선총독부가 지지하고 추진했다.[152]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도 천황제 파시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켜 '황국신민'을 대량으로 주조해내려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참정권은 천황제 파시즘체제를 옹호하는데 한국인을 끌어넣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 중국과 필리핀 남양군도, 그밖에 동남아 각지로 끌려간 한국인 군속과 군인은 포로수용소 감시원 등 악역을 많이 맡아 일제 패전 후 연합군에 의해 전범으로 처형되는 등 역시 이 지역으로 끌려간 일본군성노예, 노동자들과 함께 희생이 컸다.

황국신민화운동은 역시 교육에서 자신의 성격을 잘 드러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1938년 3월 일제는 조선교육령을 개정, 공포하여 '조선어'를 수의과목으로 바꿈으로써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는데, 이 교육령에 의해 보통학교가 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가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명칭이 바뀌었고, 새로 설치한 공립학교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별하지 말고 받아들이게 했다.[153] 이 시기에 마련된 소학교교육방침 1항은 "국민도덕 함양, 국체의 本義를 明徵하여 황국신민으로서 자각, 振起하여 皇運扶翼의 길에 철저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했다.[154]

1938년 3월 공포된 소학교 규정은 "'國史'는 肇國의 유례와 국운진전의 大要를 교수하여 국체의 존엄한 所以를 알게 하여 황국신민된 정신을 함양하는 3것을 요지로 한다"고 명시했는데, 황민화교육으로서의 '국사'교육이 전형적으로 실시된 곳이 한국이었다. 일제는 國體明徵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역사교과서도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던바, 그리하여 개정, 발행된 것이 ≪초등국사≫였다.(卷1 1937, 卷2 1939) 이 교과서는 목록만 보아서는 한국사 관계사항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일본의 국정교과서와 구별이 안 되는 거의 같은 목차였는데, 한국사 관계사항은 군데군데 들어가 있었다. ≪초등국사≫가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것은 그것이 개정된 1940

145) 朴慶植, 앞의 책 下, p.27
146) 조선총독부 고위관리 육성 증언, 앞의 글, p.199(田中武雄증언)
147) 박경식, 앞의 글, p.65.전체 인원은 자료에 따라 근소한 차이가 있다.(이상우, 앞의 글, p.355참조)
148) 일본 대장성 관리국, 앞의 책 2, p.23
149) 조선총독부 고위관리의 육성 증언, 앞의 책, p.151, 214(田中武雄 및 조선총독부학무국 학무과장 本多武夫 증언)
150) 일본 대장성 관리국, 앞의 책 2, p.46
151) 宮田節子, 앞의 책, p.140, 145
152) 조선총독부 고위관리의 육성증언, pp.154-155, 229, 235(田中武雄 등 증언) 1945년 4월 중의원의원선거법중 개정법률 및 귀족원령 중 개정이 공포되어 귀족원의원으로는 尹致昊 등 7명(대만인 3명)이 칙임되었고, 중의원의원은 제한선거로 치러지게 되어 있었는데, 한국인 23명, 대만인 5명을 배정하였다.(위의 책, p.222)
153) 磯田一雄, <황국의 모습을 좇아>, p.208
154) 劉奉鎬, 앞의 책, p.212

년이었다. '철저한' 황국신민을 만들기 위해 일본인 학생들이 배우는 것과 같은 교과서가 제작된 것이었다. 1941년에 개정된 ≪초등국사≫ 6학년용은 冒頭에 '제1 황국의 목표' '八紘一宇의 이상' 등이 실려 있다. 1944년에 나온 조선총독부의 ≪초등국사≫ 제6학년 재개정판은 冒頭에 '황국의 목표'를 4면에 걸쳐 실었던바, 1943년 11월 일본 東京에서 중화민국 만주 필리핀 등 6개국대표가 모여 대동아회의를 열어 대동아공영의 결의를 다지고 천황의 궁중초대에 감격하여 東亞 一體를 다졌다는 내용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 5면에는 '八紘一宇의 理想'이라는 제목 아래 역시 '대동아'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기술이 들어갔다. 광적으로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미화한 시국선전문을 초등학교에서 역사교육으로 그것도 맨 앞머리에서 가르치도록 한 것이었다.[155]

Ⅱ. 독립운동

1. 머리말

독립운동을 타국 영토에서 한다는 것은 국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한 것을 제외한다면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인도나 필리핀의 독립운동처럼 대개의 경우는 주민들이 사는 국내에서 하기 마련이다. 베트남은 중국 화남지방 등 국외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일시적이었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 한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았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한국의 독립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혹한 관헌통치하에서 독립운동은 철저한 탄압의 대상이었을 뿐이고, 이 때문에 독립운동과 연관된 정치활동이 국내에서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국내에서는 어느 경우도 '불법'인 시위투쟁 지하투쟁의 형태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은 대부분이 국외에서 전개되었다. 국외 독립운동은 국내와 연결된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연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자들의 지하투쟁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두가 국외가 중심이었으며, 일시적인 경우가 많았다.

일제의 지배정책으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 특히 무장투쟁은 주로 국외에서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 지역이 아니고 국가와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여러 지역에서 전개되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주(멕시코 포함) 등지에서 전개되었고, 중국의 경우는 동북지방 곧 만주와 산해관 안쪽 곧 關內에서 전개되었으며, 1930년대 말 이후에는 중국공산당과 관련을 맺으며 화북·연안지방에서도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와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여러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은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기도 했지만, 독자적으로 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처럼 일제의 가혹한 탄압 때문에 독립운동이 국외에서 더 많이 전개되었고, 그것과 국내와의 연결이 부분적 일시적이고 국외의 민족해방운동단체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한 것은 다른 나라의 민족해방운동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 독립운동의 특징으로, 해방 후 민족국가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한 기본적인 한 요인이 되었다.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은 지리적 위치나 여건, 한국인 거주자의 多寡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

155) 磯田一雄, <皇國의 모습을 좇아>, pp.203-208, 222-223, 234-236

이 점에서 만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만주는 압록강 두만강의 대안에 위치하고 있었고, 한 통계에 따르면 이미 1910년 이전에 2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다.[156] 만주 이주민・망명자들은 일제의 강점 이후 계속 늘어나, 한 통계에 의하면 1921년에 488,656명에 이르렀는데, 이중 63%인 307,806명이 북간도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157] 한국인 이주민은 만주에 와서도 중국인의 땅을 농사짓는 소작인들이 대부분이었던바, 이들이 독립군이나 빨치산의 주된 구성원이었고,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해준 기반이었다. 1920년대 초까지 만주지방 다음으로 독립운동이 왕성히 전개된 러시아에도 연해주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인이 1908년 현재 약 6만여 명,[158] 1921년의 경우 9만4천여 명 또는 약 15만 명이 거주했다.[159]

독립운동을 하는데 지리적 여건이나 한국인 이주민의 다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주민・망명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치적 조건이다. 일본의 경우 한국인이 만주지방 못지않게 많이 살고 있었지만, 독립운동이 활기 있게 일어나지 않은 것은 정치적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노동운동과 연결된 항일・반일운동이 일어났다. 미주의 경우 한국인 이주민・망명자가 1만 명 내외였는데, 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미주도 하와이의 경우가 말해주듯 그 지역의 정치 상황이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 상해에 거주민이 소수였는데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오래 동안 활동하였고, 의열단의 활동도 활발하였으며, 아나키스트들의 활동 등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이 있었던 것은 상해가 교통이 편리하여 국내 및 만주 등 각지에 왕래하기가 편리하다는 점도 작용했지만 프랑스조계에 일제 관헌이 출입하기 어려웠던 것도 중요 요인이었다. 1930년대 초 중반 이후 중화민국정부는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1940년대에는 중국공산당도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했다.

정치적 조건이 독립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러시아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러시아에서 한족회가 조직된 것은 혁명으로 시베리아가 격동에 휩싸인 1905년 연말이었다. 2월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1917년 6월에는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서 全露한족대표자회가 열려 고려족중앙총회가 조직되었다.[160] 모두다 혁명기에 활발한 활동을 한 것이다. 1923년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에서 김규식 등 창조파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인하고 새 정부를 구성했던바, 러시아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러시아에 갔으나, 1924년 2월 퇴거명령을 받은 것은 1923년 9월 이후 있었던 소・일 국교교섭 때문이었다. 1925년 1월 북경에서 소・일기본조약이 조인되어 두 나라 사이에 국교가 수립됨에 따라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중국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이 지역에 한국인이 다수 이주한 것이 기본요인이지만 정치 정세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압록강 두만강 대안에 한국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자체가 그 만큼 청의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이완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1911년 신해혁명은 이 지역에서 중국 당국이 한국인을 통제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1914년 북간도의 간민회가 그 지역에 있는 일본영사관의 압력으로 해체되기는 했지만, 서간도지역에서 주민자치가 잘 되고 신흥무관학교가 계속해서 인재를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이나 1920년대 중반에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등의 3부가 조직되어 군사활동

156) 김철, <식민지시기의 인구와 경제> ≪일제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출판사, 1988, p.118
157) 辛珠柏,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세아문화사, 1999, pp.28-29
158) 尹炳奭, <연해주 한인사회와 한국민족운동>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pp.173-174
159) 金俊燁・金昌順, ≪한국공산주의운동사≫ 1, 고려대학교출판부, 1967, pp.30-31
160) 潘炳律, ≪誠齋 李東輝일대기≫ 범우사, 1998, pp.138-140

과 자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일제 침투의 강도를 포함하여 역시 이 지역의 정치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1925년 6월 三矢협정이 중국 봉천성 경무처장 于珍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三矢宮松 사이에 맺어짐으로써 독립군은 적지 않게 압박을 받았다. 1931년 9월 일제의 만주침략은 한국인의 항일무장투쟁을 빨치산 중심으로 변화하게 했다. 변화된 정치정세 하에서 일부 독립군은 1932, 33년경을 전후하여 관내로 넘어갔고, 조선혁명군은 남만주지역을 중심으로 빨치산과 비슷한 형태로 전투를 벌였다.

독립운동의 변화는 일제의 통치변화와 약간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황국신민화운동이 중일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에 비해 민족해방운동은 1931년 일제의 만주침공이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만주를 관동군이 직접 장악했다는 것은 3부 시기와 같은 형태의 독립군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만주에서는 빨치산 형태의 투쟁이 주된 무력투쟁이 되었다. 또한 일제의 만주침공은 중국정부와 중국인으로 하여금 일제 침략에 더욱 경계심을 갖게 하여, 尹奉吉의 폭탄투척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 중국정부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독립운동자들은 독립운동기지 건설운동이 구체적으로 구상되기 시작한 1908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일제를 물리치려면 일제가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등과 전쟁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제의 만주침략으로 일제와 중국 간에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독립운동자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독립운동자들은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에 더욱 큰 기대를 갖고 민족해방운동을 치열하게 벌였으며, 동시에 국내외에서 건국준비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1940년을 전후하여 일제의 중국침략이 광범위한 전선에서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중국의 화북·연안 지방에서 대일전쟁이 활기를 띠는 등 연합국과 보조를 맞추어 무장활동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독립운동은 일제의 강점에서 3·1운동까지의 시기, 3·1운동 이후에서부터 일제의 만주침략에 이르는 시기, 일제의 만주침략에서부터 패망하기까지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3·1운동 이전의 1910년대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점했을 때 1907년 이래 일제의 의병에 대한 대공세로 국내 의병세력은 상당히 쇠약해져 있었다. 1910년대 중반에는 蔡應彦부대가 활약한 정도였고, 그 외에 몇몇 의병부대가 산발적으로 싸웠다.

3·1운동 이전 국내 독립운동단체로는 대한광복회가 주목된다. 의병관계 인사를 주축으로 하여 豊基광복단 및 국권회복단의 일부 적극적인 항일 인사가 1915년에 결성한 대한광복회(총사령 朴尙鎭)는 관찰사를 지낸 친일부호 張承遠의 처단이 말해주듯 일제통치에 저항하지 않거나 협력하는 부호를 응징하여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면서 군자금을 강제로 모집하는 활동, 일제 세금의 압수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대한광복회는 대구 영주 삼척 광주 예산 연기 인천 龍川 안동(만주) 장춘(만주) 등에 거점을 두었다. 그리고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등 만주지방의 독립운동세력과 연계를 모색하는 한편 副司令 李爽大를 만주에 보내 독립군 양성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이석대가 전사한 1917년 이후에는 金佐鎭을 부사령으로 임명하여 만주에 보냈다.[161]

161) 조동걸, <대한광복회의 결성과 그 선행조직>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10년대 국외의 독립운동으로는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건설운동이 호응을 크게 받았다.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 건설운동은 독립운동 및 독립군의 기본 역량 또는 토대를 조성하고 배양하기 위한 기지 또는 기반을 건설, 구축하는 운동을 가리킨다. 이 운동의 추진세력은 즉각적인 무력항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여 중·일전쟁, 러·일전쟁, 미·일전쟁 등과 같이 유리한 기회가 오면 일제와 독립전쟁을 벌이고자 하였다. 이처럼 직접적인 무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제와의 독립전쟁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한 점에서 경제적 실력 양성에 주안점을 둔 실력양성운동 또는 준비론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건설운동은 1908년 미주와 연해주, 국내 등에서 제기되어 1910년 일제의 강점 전후시기에 구체화되었다. 李相卨 李承熙 등은 미주에서 보내온 자금 등으로 중·러 국경지대에 위치한 흥개호 부근의 蜂密山(중국령) 일대에 韓興洞을 건설하고 韓民학교를 세웠다. 1914년 이동휘 등은 東北滿 汪淸縣 綏芬大甸子 라자구에 비밀사관학교를 세웠다.(교장 이동휘) 학생은 8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간도주재 일본영사의 항의로 1915년 말경 폐쇄되었다. 朴容萬 등은 미국에서 독립군 양성에 힘써 하와이에서 1914년 300명에 달하는 국민군단을 편성했고, 네브라스카주에서 소년병학교를 운영했다. 멕시코에는 崇武학교가 있었다.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건설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서간도지방의 신흥무관학교이다. 신흥강습소(중국당국에 제출한 정식 명칭) 신흥학교 신흥중학교로도 불린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6월에 세워진 이래 1920년까지 계속 학생을 배출하였으며, 대한제국무관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된 군사교육과 중등과정의 교육을 실시했다. 3·1운동 이후에는 지원자가 부쩍 늘어 무관학교가 세 군데로 늘어났다. 신흥무관학교가 이 같이 독립군 요원들을 다수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 안동 선산 등 각지에서 온 망명자들이 李會榮형제의 자금력과 잘 결합되어 耕學社 - 扶民團 - 한족회 등의 주민자치가 잘 운영되었고, 서간도의 정치상황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신흥학우단을 만들었고, 1915년에는 제2군영으로 白西농장을 설치하여 고된 훈련을 하였다.[162]

1910년대 중반에는 임시정부와 비슷한 독립운동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1914년 이상설 이동휘 李東寧 등은 연해주에서 윤병석이 최초의 임시정부로 평가한 바 있는 대한광복군정부(正統領 이상설, 후임 정통령 이동휘)를 조직했으나 대전이 발발하자 활동이 금지되었다. 다음해인 1915년에는 상해에서 이상설 朴殷植 申圭植 등이 신한혁명단(본부장 이상설)을 조직하여 광무제를 망명시킬 계획을 세웠다.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지 약 3달 후인 1917년 7월 申圭植趙素昻 朴容萬 등이 중심이 되어 발표한 <대동단결선언>은 국민주권을 주장하고 임시정부 수립을 도모했고 독립의 절대성을 고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선언에서는 주권이란 민족 고유한 것인데, 隆熙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은 국민에게 양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주권행사의 의무와 권리가 국민에게 있지만, 국내 동포는 일제한테 구속되어 있으니 그 책임을 해외동지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해외 각지에 있는 단체를 규합, 통일하여 유일무이의 최고기관을 조직할 것을 역설했다. 이 선언은 "독립 평등의 聖權을 주장하야 동화의 魔力과 자치의 劣根을 防除할 것"임을 선언하였다.[163]

1989, pp.269-277 및 조동걸, <대한광복회연구>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참조

162)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국외 망명자들이 독립운동과 직결시켜 벌인 중요한 사업이 교육이었다. 일제의 한 기록에는 1916년 12월 현재 圖們江 대안지방에 163개교에 학생 4,094명, 압록강 대안 지방에 76개교에 학생 2,177명, 노령 및 미주지방에 41개교에 학생 2,102명이 있다고 소개했다.[164] 신흥학우단은 이주민이 50호 이상 살고 있는 지역에 소학교를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서간도에서는 20호 또는 몇 십호만 거주해도 소학교를 세워 의무교육이나 다름없이 교육을 시켰다는 기록도 있다.[165] 일제 기록에 의하면 한국인 적령아동의 보통학교 취학률은 1911년 1.7% 24,537명, 1919년 3.9% 89,278명이었고, 중등과정에 해당하는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수가 1922년에 모두 합해 7,691명이었다.[166] 1916년 현재 일제의 만주지방 교육기관과 학생수 조사에는 빠진 것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면, 시설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주민사회에서의 초·중등 등의 근대 교육은 조선총독부에 의한 그것보다 인구 1천명당 학생수에서 월등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망명자·이주민들이 교육을 중시한 것은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독립운동에 힘쓰게 하기 위한 점도 있었지만, 근대문화를 섭취하여 근대사회 근대국가를 이룩해야 한다는 목적이 강했다. 이러한 점은 식민지교육과 자주적 교육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식민지 근대화와 자주적 근대화와도 연관이 있다.

1910년대에 독립운동을 이끌어간 사람들은 柳麟錫계열의 의병과 같이 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동걸이 명명한 혁신유림이나 근대적 지성을 가진 지사(선각자)들이 대부분이었다.[167]

군주제를 지지한 복벽주의자들이 소수인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1910년대 독립운동자들은 대부분이 공화제를 지지했다. 조동걸은 광복회 지도자들을 혁신유림이라고 주장했는데,[168] 유가의 체취가 물씬나는 박상진 金漢鍾 등은 일제 경찰 취조에서 광복회의 목적은 "국권을 회복하여 공화정치를 실현하는데 있다"라고 진술했다.[169] 왜 이미 1910년대에 공화주의자가 대세를 이루었는가는 그것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망명자들은 상당수가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명문 출신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서간도의 부민단 한족회와 같은 망명자·이주민사회는 여러 지역,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치를 하였고, 공동으로 교육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민주주의방식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평등과 자유를 중시했다. 1911년 경학사를 조직할 때 이미 대중들의 노천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신흥무관학교에 원로로 참여한 68세의 金大洛은 부민단이 조직되기 전 일종의 자치단체로서 만들어진 共理會취지서(1913)에서 "평등의 권리는 천한 사람에게까지 미치고 자유의 종소리는 부인과 어린이에까지 미치었다"라고 피력했다.[170] 님 웨일즈의 ≪아리랑≫에 나오는 金

---

163) 조동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 연구≫ pp.316-319
164) 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 <재외조선인경영 각 학교 서당 일람표>(大正 5년 12월 調) ≪현대사자료≫ 27, 일본 みすず書房, 1970, pp.161-163
165) 서중석, 앞의 책, pp.128-129
166) 일본 대장성 관리국, 앞의 책 2, pp.35-39
167) 조동걸은 1) 전통적 척사유림의 경력이 있으면서, 2) 사상이 일변하여 자주적 민족주의 사상의 정립을 모색하고, 3) 봉건주의·復辟주의를 극복한 근대국가의 이념을 가지면서도, 4) 유가의 생활윤리를 고수한 유림을 혁신유림으로 규정했다.(조동걸, <대한광복회연구>, pp.302-313)
168) 조동걸, <대한광복회연구> 등 참조
169) 위의 글, p.304

山(본명 張志樂)은 3·1운동 직후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서간도 독립운동의 중심지 三源浦를 진정한 자치제가 실시된 조그마한 민주주의 도시로 묘사하고, “모든 한국인들은 단 두 가지만을 열망하고 있었다. -독립과 민주주의. 실제로는 오직 한 가지만을 원했다. -자유” 라고 말했다.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은 자유를 위해서는 무슨 일인들 못할쏘냐는 격정에 싸여 있었다.[171] 망명자들은 민권에도 관심을 보였다.

3. 3·1운동과 그 이후 독립운동(1919~1931)

1) 3·1운동

3·1운동은 단지 사베르통치에 조종을 고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의 지배를 총체적으로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개인으로써, 계층·계급으로써, 민족으로써 자각하는데 전환점이 되었다. 3·1운동을 통해 한국인은 새로 태어난 것이다. 한국근대사에서 1860, 70년대로부터 1910년까지를 前期 근대로 본다면, 3·1운동은 근대적 성격이 크게 확충되는데 분수령이 되었으며, 따라서 그 이후를 후기 근대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식민주의 근대와 차별성을 갖는 한국인 스스로에 의한 근대 곧 자주적 근대가 3·1운동을 분수령으로 하여 폭넓게 자리를 잡아간 것이다.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하여 있었던 세계사적 전환기의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국내에서의 일제 지배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 독립에의 갈구로 표출된 독립시위운동이었다.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자주적 근대가 폭넓게 자리를 잡아간 데에는 일제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하여 있었던 세계사적 전환기의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일제의 대한정책의 변화는 3·1운동과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에 일어난 일본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은 3·1운동을 겪으면서, 또 세계적 조류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민족의식에 의해 한동안 좌절되었던 근대적 민족 형성이 급속히 촉진되었고 그리하여 민족주의가 강력한 기반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동화정책-황국신민화정책으로 대변되는 일제에 의한 대일본제국으로의 ‘신민(국민)만들기’와 대립, 갈등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 속에서 한국인은 자아분열현상이 때로는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3·1운동이 일제의 지배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살필 수 있다. 3·1운동은 특정한 일부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3·1운동 직후에 쓰여진 朴殷植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따르면 1919년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집회 또는 시위는 전국 211府郡 西北間島 사할린 등지에서 1,542회 일어났다. 국내의 경우 평안남북도가 34개 지역에서 315회,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가 25개 지역에서 297회 일어나 가장 횟수가 많고, 인구가 적고 산간지대인 강원도가 13개 지역에서 57회 일어나 가장 적게 일어났지만,[172]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망라하고 있다. 3·1운동은 3월 1일 서울과 평북 평남 황해 함남의 주요 도시에서 일어나 3월 중순까지 13도 전체에 파급되었고, 주요 도시로부터 군청 면사무소 소재지로 확대되었으며, 리·동에

170) 서중석, 앞의 책, pp.261-272
171) 님 웨일즈, ≪아리랑≫ 조우화역, 동녘, 1984, p.113
172)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서울신문사 출판국, 1946, pp.77-96

서도 일어났다. 서간도와 북간도의 여러 지역에서도 이미 3월 초중순부터 독립선언식과 축하회, 시위가 벌어졌고,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 사할린, 미주로까지 확대되었다.[173]

3·1운동이 일제 지배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었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거의 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일부 특정 계급이나 계층이 주로 시위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일부 관공리나 지주를 포함하여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독립운동은 일부 종교 교단 및 학생들만의 사업이 아니다. 관공리도 상인도 농부도 거사해야 한다. 우리가 목숨을 버리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자는 국민이 아니다"라는 주장은[174] 전국 공통의 현상이었다. 한 자료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1운동으로 인한 入監者가 전체 입감자 8,767명 가운데 교사 277명(전체 입감자의 3.15%), 학생 972명(11.06%), 종교인 279명(3.18%), 공무자유인 313명(3.56%), 농(林·漁)업 5,209명(59.28%), 광업 10명(0.11%), 공업 276명(3.14%), 상업(교통업 포함) 823명(9.37%), 노동자(奴僕 日傭 포함) 326명(3.71%), 무직 302명(3.44%)으로 나와 있다.[175] 각계각층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입감자가 각계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1919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입감자 8,511명의 구성을 보면 교사·학생 14.4%, 종교인 3.1%, 기타 공무자유업자 3.3%, 농민(일부 지주 포함) 58.4%, 상업 8.4%, 공업 3.3%, 기타 자영업종사자 2.0%, 무직 3.1%로,[176]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같은 해 직업 구성에서 농(임·어)업 86.22%, 공업 2.06%, 상업(교통업 포함) 5.87%, 공무자유업 1.52%, 기타 有業者 1.40%, 무직 1.40%[177]와 차이가 있지만, 농민 중에는 산간벽지에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시위군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감된 자가 적을 것이라는 점, 학생 교사 종교인 등이 갖는 위치 등을 감안하면 대체로 당시 한국인의 계층 또는 직업의 비중과 입감자의 비중이 맞아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3·1운동에는 또한 의병들이 적극 참여했고,[178] 국외로 간 의병들은 독립군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은 의병들의 성격을 볼 때 당연한 귀결이었다.

학생과 교사들은 일제 지배에 예리한 비판력을 가지고 있었고 민족자결주의의 조류에 예민하게 호응했기 때문에 독립시위운동에서 선도역을 맡았다. 종교인이 3·1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일제의 종교정책에 대한 불만과 함께 敎堂 등을 통해 무단통치에서 집단적 활동이 가능했던 것이 학생사회를 제외하면 종교계밖에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종교인이 다수 포함된 상인, 공업종사자 등 부르주아층은 상대적으로 세계 조류에 예민한 층이기도 했지만, 무단통치기에 계급적 발전이 저지당했다.[179] 노동자들은 소수였고 노동자의식도 아직 미숙한 편이었지만, 3월 2일 서울시내에서 만세시위를 벌린 이래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3월 22일에는 노동자대회를 열었고, 그 뒤에도 파업 등의 투쟁을 벌였다.[180]

---

173)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독립운동사≫ 2, 1968, pp.194-196
174) 이윤상, <평안도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p.298
175) 愼鏞廈, <3·1독립운동의 사회사>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p.331
176) 정연태·이지원·이윤상,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참가계층>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p.238
177) 신용하, 위의 글, p.332
178) 조동걸, <의병전쟁과 3· 1운동의 관계>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및 조동걸, <3·1운동의 지방사적 성격>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p.430 참조
179) 신용하, 앞의 글 ; 정연태·이지원·이윤상, 앞의 글
180) 정연태·이지원·이윤상, 앞의 글, p.241, p.248

민족의식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었고 세계 조류를 받아들이는 데서도 늦을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고 일제의 관공서를 습격하는 등 폭력투쟁을 주도해나간 것은 일제 지배의 성격과 관련해서 주목할 바가 적지 않다. 강원도지방의 경우 헌병대장의 보고에서처럼 농민들은 공동묘지제, 화전경작 제한, 임산물 채취의 부자유, 주세와 연초세가 불만을 갖게 했고, 일본인의 어업 침투, 도로(신작로)공사에서의 저임금과 부역 등도 불만의 요인이었다.[181] 한국이 독립하면 재산을 평등하게 나눠 갖고 국유지는 소작인의 소유지가 되니 만세를 불러야 한다는 선동에는 농민의 염원이 깃들어 있었다.[182]

3·1시위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광무제의 죽음에 望哭禮를 올린 사람들을 포함하여 독립을 바랐고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만세" "독립만세"를 외쳤을 때 모두다 독립의 像이 명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독립만세"를 외친 경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차이가 있었다. 평안도의 경우에서처럼 이미 독립되었다는 생각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경우에서부터 우리 지역만 독립만세시위를 벌이지 않으면 독립실현 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서 참여한 경우, 독립만세를 절규하면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183]

3·1시위운동에서 드러난 독립에의 갈구나 독립을 위한 투쟁은 자유 정의 인도 사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3·1독립선언서>에 쓰여진 바 "위력의 시대가 去하고 정의의 시대가 來하도다"라는 인식은 특히 교사 학생 종교인들이 많이 가졌던 것이지만, 3·1운동에서 일반적으로 있었던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184] 이러한 자유 인도 정의의 사상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의 것이 많았다고 하더라도[185] 제국주의 지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위에서 농민들의 均產主義的 지향을 보았지만,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는 평등의식도 고조되었다. 만주지방에서 나온 <대한독립선언서>는 특히 평등과 평화, 자유를 강조하여, 민족평등을 전지구에 전파시키는 것을 한국 독립의 제1의로 삼았고, 모든 동포한테 同權同富를 실현시킬 것을 다짐했다.[186] 이 선언서가 각별히 평등을 강조한 것은 1910년대 이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이념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평등의식은 민족의식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것은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치이념이 되었다.

3·1운동은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당하지 않는다"는 반성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다. 교육열이 각지에서 열화와 같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 야학이 생겨났으며, 나아가 노동야학까지 생겼다. 팽창한 교육열로 공립보통학교는 학령아동 중 지원자의 30%조차도 수용하지 못했다. 李商在 등의 조선교육협회는 총독부에 의무교육의 조속한 실시와 한글교육 강화 등을 촉구하였고, 조선여자교육회에서는 문맹퇴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청년단체의 활동으로 야학 등 사설강습소(회)는 예컨대 경기도에서 1922년 4월부터 1924년 8월말까지 346개소가 설립되었다.[187]

---

181) 조동걸, <3·1운동의 지방사적 성격>, p.424
182) 박찬승, <3·1운동의 사상적 기반> ≪3·1민족해방운동연구≫ p.413
183) 이윤상, 앞의 글, p.299
184) 조동걸, <3·1운동의 이념과 사상>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pp.400-401
185) 정연태, <경남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연구≫ p.382 참조
186) <대한독립선언서>전문은 ≪신동아≫ 1972년 별책부록 ≪한국현대명논설집≫ pp.12-13 참조
187) 金炯睦, <1920년대 전반기 경기도 야학운동의 실태와 기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pp.105-111. 이 글에서는 3·1운동 이후 야학이 60,000여개 이상이 설립 운영되어 야학운동의 '전성시대'를 맞았다고 기술했다.(p.102)

3·1운동은 개인의 각성을 촉진시켰고, 3·1운동 이후부터 소작쟁의 노동쟁의와 노농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이 의미하듯 농민과 노동자의 각성을 촉진시켰다. 또한 여성 자신에 의한 여성운동도 이 시기에 나타나고 있으며, 약간 늦지만 형평운동도 일어났다. 3·1운동과 민족의식, 민족의 형성, 민족주의와의 관계는 앞에서 강조했지만, 민족해방운동, 항일무장투쟁이 그 이전과는 달리 민중을 기반으로, 또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조직적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3·1운동은 일제의 정책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시키는데 基軸的 작용을 했다.

2)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

3·1운동과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의 정세 및 신조류는 독립운동을 크게 고양시켜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단체가 조직되었다. 임시정부는 대한국민의회(露領, 1919. 3.) 대한민국임시정부(상해, 1919. 4.) 漢城정부(서울, 1919. 4.) 등 각처에서 1919년 3, 4월에 조직되었다. 상해임시정부는 국내와 노령, 만주에서 온 대표와 중국 관내에 있었던 인사들이 1919년 3월 12일 상해 프랑스조계에 모여 임시정부수립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여 임시의정원(의장 李東寧)을 구성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며, 국무총리제를 채택하여(국무총리 李承晩) 4월 11일 수립되었다. 상해임시정부는 미주에서 安昌浩가 오면서 통합정부 수립을 모색하여 9월에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노령국민의회와 통합하여 상해에 통합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렇지만 대한국민의회의 文昌範 등이 상해임시정부측에서 통합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1920년 2월 해체했던 국민의회를 다시 설치함으로써, 국민의회내에서 이동휘가 이끄는 한인사회당 등 일부만이 합류하여 부분적 통합이 되고 말았다.[188]

대한민국임시정부는 交通局 聯通制 등을 통해 국내 민중과 연결되어 있었고, 국외 동포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거류민단을 두었다.[189] 미주의 동포들은 해방될 때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서간도의 西路軍政署와 북간도의 북로군정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받들었고, 그뒤 참의부의 독립군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받들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다른 임시정부에서도 민주공화제를 채택했지만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無하고 일체 평등하다고 규정했고,(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信敎·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서신·주소 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享有한다고 하였으며,(제4조)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有한다고 하였다.(제5조) 제5조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보통선거제를 채택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3조 제4조 제5조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일부 민주주의국가에서 실현된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제국의 정치현실, 특히 한국에서의 정치현실과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보통선거제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수용은 1920년 이후 일부 사회주의자들의 급진적인 주장을 제외하면 독립운동단체들한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그것은 해방후 각 정당 사회단

188) 潘炳律,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임시정부의 통합정부수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1986 참조
189) 尹大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운영과 독립방략의 분화(1919-1930)>,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1999, pp.74-91

체에 의해 한층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190]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인이 소수밖에 살고 있지 않은 국제도시 상해에 위치했다는 것은, 국무총리 이동휘나 만주지역에서 온 의정원의원들이 무력투쟁을 강력히 주장했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도 독립전쟁론을 채택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외교가 중심이 된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1921년 11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워싱턴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9개국이 참여하여 열린 회의(워싱턴회의, 일명 태평양회의)에서 한국의 독립문제에 대해 하등의 관심이 표명되지 않고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확인되자 제국주의 열강의 도움을 받자는 주장(외교론)은 곤경에 처했고, 상해임시정부와 부르주아·지주층의 동향에 영향을 미쳤다. 상해임시정부는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 등의 문제로 내분에 휩싸여 국내외 민족해방운동세력을 새로이 단합시키고 민족해방운동의 노선과 방책을 정립하기 위해 1921년부터 제기되어온 국민대표회가 1923년 1월 상해에서 열렸다. 국내와 세계 각지의 독립운동단체 대표들이 집결하여 독립운동의 전반적인 방략을 숙의했는데, 결국 상해임시정부를 개조하자는 개조파와 상해임시정부 대신 새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창조파가 맞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간도에서는 1919년 3월 12일 유하현 삼원포에서 약 2백여명이 모여 독립축하집회를 갖고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한 이래 독립운동의 열기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4월에 이주민자치단체인 한족회가 삼원포에서 부민단과 다른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만들어졌고, 한족회에서는 바로 군사단체로 軍政府를 조직했다. 같은 시기에 유인석계열의 의병이 중심이 되어 삼원포부근에서 대한독립단이 결성되었다. 대한독립단원들과 군정부의 의용대원들은 국내 주재소 등을 습격하고 국내외에서 친일파를 처단하고 부호들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거둬들였다.[191] 洪範圖가 이끈 북간도의 대한독립군은 1919년 8, 9월에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했다. 홍범도부대는 10월에 滿浦鎭에 진입했고 慈城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이와 같은 독립군의 활동은 1920년에도 계속되어 일제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3월까지 독립군부대들의 국내진입작전이 24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192] 독립군의 활동에 불안을 느낀 중국당국은 1920년 1월 한족회와 독립단의 해산을 명하는 등 탄압을 했다. 일제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해 5월에서 8월까지 중일합동수색이라는 것을 벌였던바, 上田隊, 坂本隊는 서간도 각지에서 수백 명의 독립운동자를 체포하고 살해했다.

독립군과 일본군과의 규모가 큰 전투는 북간도에서 있었다. 북간도의 독립군은 1920년 5월 더욱 강화되어 대한독립군과 다른 독립군이 연합하여 大韓軍北路督軍府를 조직했다. 이 독립군에 소속된 소부대가 6월 4일 두만강을 건너 헌병순찰소대를 격파한 뒤 귀환했고,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 南陽수비대 1개 중대와 헌병경찰중대가 두만강을 건너 추격하다가 잠복했던 독립군에 의해 三屯子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되자 羅南의 19사단은 安川소좌로 하여금 越江추격대대를 편성하여 독립군을 공격케 했으나 6월 7일 鳳梧洞에서 3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지형지물을 잘 이용한 홍범도부대한테 크게 패했다.[193] 나라를 강점당한 뒤 있었던 첫 번째 중요한 승리였

190)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역사비평사, 1996, pp.30-33
191) 金承學편저, ≪韓國獨立史≫ 독립문화사, 1965, p.328, 332
192) 윤병석, <연해주독립군과 국내 진입작전> ≪재발굴 한국독립운동사≫ 한국일보사 출판국, 1987, pp.173-175
193) 봉오동전투에서 일본군을 얼마나 사살했는가는 자료에 따라 다르다. 상해임시정부 軍務部에서는 157명 사살로, 중국신문인 ≪上海新聞報≫에서는 일본군전사자 150명, 북간도 국민회 통고문에는 적

다. 독립운동자들은 이 전쟁을 '독립전쟁의 개전' '독립전쟁의 제1회 회전' 등으로 불렀다.[194]

신용하가 여러 논문에서 '청산리독립전쟁'이라고 부른 청산리전쟁은 봉오동전투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일제는 중국 동북지방의 독립군을 섬멸하기 위해 10월초 琿春사건을 조작하여[195] 이 지방에 군대를 보낼 구실을 만들어 제19사단과 시베리아에 출동했던 浦潮軍, 그리고 관동군 등으로 독립군 공격부대를 편성했다. 그중 김좌진의 대한군정서(북로군정서)와 홍범도의 연합부대와 싸운 일본군 주력부대는 東正彦소장이 이끈 東지대로 기병 포병을 포함하여 5천명 내외였다. 청산리전쟁은 여러 곳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특히 맨첫번째 전투로 김좌진부대와 싸운 10월 21일의 白雲坪전투, 홍범도부대가 싸운 完樓溝전투(10월 22일), 김좌진부대 홍범도부대와 싸운 漁郎村전투(10월 22일), 최후의 전투로 홍범도부대와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투를 벌인 古洞河谷전투가 규모가 컸다.[196] 청산리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베트남 등 반제투쟁이 활발하였던 지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침략자들에 대한 큰 승리였다.

봉오동전투에 이어 청산리전쟁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그해 10월부터 11월에 걸쳐 '庚申참변' '경신학살' 등으로 알려진 주민집단학살을 자행하고, 부녀를 강간했으며, 민가와 교회 등을 방화했다. 초토화작전을 편 것이다. 중국당국이나 한국인들의 조사, 기독교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해서 북간도지역의 경우 백운평에서 50여명, 獐巖洞에서 30여명이 학살당하는 등 주민집단학살의 일부가 알려졌다. 서간도에서의 학살은 관동군 소속 19연대와 20연대에 의해 저질러졌다.[197] 조

의 대대장 중대장 준사관 각 1명, 병졸 49명 즉사 등으로 되어 있고, 일본군 전투보고에는 아군 전사 병졸 1명, 적군(독립군) 33명으로 되어 있다.(윤병석, <독립군의 봉오동승첩> ≪국외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pp.58-62) 중국 연변대학 교수 金春善은 약 150명의 일본군을 살상한 것으로 추정했다.(김춘선, <발로 쓴 청산리전쟁의 역사적 진실> ≪역사비평≫ 2000 가을 p.263)

194) 신용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한국근대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88, pp.302-306 ; 윤병석, <봉오동 승첩> ≪獨立軍史≫ 지식산업사, 1990, pp.141-157

195) 朴昌昱, <훈춘사건과 '장강호'마적단> ≪역사비평≫ 2000 여름

196) 신용하, <독립군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독립전쟁> ≪한국근대민족운동사연구≫ pp.262-291 ; 윤병석, <청산리대첩> ≪독립군사≫ pp.165-194. 청산리전쟁에서의 일군 사살에 대해 상해임시정부 군무부는 연대장 1인 포함 1,254명으로, 중국신문인 ≪遼東日日新聞≫은 2천명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던 李範奭은 약 3천3백 명으로 기술했으며, 일본군측은 백운평전투 전사자 4명, 어랑골전투 1명, 고동하곡전투 피해없음 등으로 기록했다. 윤병석은 전과는 자그만치 1천명 이상단위였다고 평가했다.(윤병석, <독립군의 청산리대첩의 의의> ≪국외한인사회와 민족운동≫ pp.93-96) 김춘선은 목격자 증언 등을 참고하여 백운평전투 일본군 100여명 소멸, 완루구전투 일본군 약 400여명 섬멸, 어랑촌전투 일본군 약 500여명 소멸 등으로 추정했다.(김춘선, 앞의 글, p.271, 275, 277)

197) 경신년 대학살에서 학살당한 한국인 인원은 자료에 따라 차이가 적지 않다. 독립신문 87호(1920. 12. 18)에는 임시정부 간도통신원이 쓴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참상이 실려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확인된 피학살자가 훈춘현 249명, 왕청현 336명, 화룡현 613명, 연길 428명, 완루구 451명(이상 북간도지역), 유하현 삼원포 43명, 興京縣 旺淸門 305명, 寬甸縣495명, 鐵嶺 및 관전 사이 지역주민 피살 480명 등으로 되어 있으며, 未詳으로 나와 있는 지역이 많다. 독립신문 92호(1921 1 27.)에는 간도참상 後報가 실려 있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는 1920년 10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의 조사가 실려 있는데, 훈춘현 242명, 연길현 1,124명, 화룡현 572명, 왕청현 나자구 대전자 870명, 西大浦 등 그 밖의 왕청현 각지 307명, 寧安縣 海林 17명, 흥경현 왕청문 305명, 유하현 13명, 관전현 및 부근 480명 등으로 나와 있다.(pp.209-216) 중국신문인 吉長日報 1920년 11월 7일자에는 3주 사이에 연변 일대에서 조선인이 2천여 명 살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일제측은 東지대에 의해 222명이 사살되는 등 494명이 '토벌'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나와 있다.(金春善, <경신

선총독부의 '간곡한 위촉'과 자금지원으로 일본기병 중위였던 나카노(中野淸助)가 이끈 살인기계부대(長江好마적떼 포함)는 1920년 10월 중순부터 장백현 直洞 등 도처에서 수백 명의 주민을 학살하였다.[198]

독립군활동지역에 대한 일제 만행과, 3·1운동 이후 점차 즉각적인 독립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감에 따라 만주에서의 무장항일투쟁은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간도지방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으로 출현한 統義府로부터 1923년 일부가 떨어져나가 조직한 참의부를 제외하고는 군사활동 중심에서 군사활동과 행정 생계 교육 등의 자치활동을 병행하는 활동이 중심을 이루었다. 1924년 통의부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독립운동단체이자 주민자치단체인 正義府와 북만지방을 주요 근거지로 1925년 조직된, 역시 독립운동단체이자 주민자치단체인 新民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했다. 1925년 11월을 전후하여 남만주와 만주 중부지방에 17,135호, 87,003명 이상의 한국인을 끼고 있었던 정의부는 자치행정의 주요 목표로 교육과 산업의 향상을 내세우고 化興중학교(흥경현 왕청문), 東明중학교(유하현 삼원포) 등 중등학교를 건립했고, 촌마다 소학교를 세워 초등교육을 의무화시켰다.[199]

1919년 11월 중국 동북지방 길림에서 만들어진 義烈團(義伯 또는 단장 金元鳳)은 독립운동에서 이채로운 존재다. 의열단원들은 조선총독부건물, 일본천황궁앞 이중교, 식산은행·동양척식회사, 부산·밀양경찰서 폭탄투척과 서울시내에서의 총격전, 상해에서의 일본군 田中대장의 저격 등과 밀정·친일파 처단 등으로 민심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의열단의 주력은 노선을 바꾸어 1926년부터 1백명 내외가 중국 광주의 황포군관학교(교장 蔣介石)에 입교하여 군사교육을 받았으며[200] 국민당의 북벌전쟁에 참여했다. 의열단은 폭탄으로만 자신들의 노선을 밝힌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공약 10조'를 작성하여 행동의 준칙으로 삼았고, 1923년에는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을 채택했다. 신채호가 작성한 이 글은 일제의 수탈과 침략정책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민중혁명을 제창했으며, 고유적 조선, 자유적 조선을 이루고 민중적 경제·사회·문화를 건설하자고 제창했다.

3·1운동 이후 민족운동과 관계있는 부르주아층은 일제에 대해 비타협적 성격이 강한 민족주의좌파와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을 중시하면서 개량주의노선을 걸은 민족주의우파(개량주의자)로 분화되어갔다. 그러나 1920년대 전반기의 경우 양자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었고,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할지 애매한 인사가 많았다. 양자는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기성운동 등에 함께 참여했으나, 물산장려운동에도 부르주아 상층은 주로 초기에 참여하는 등 양자는 얼마간 차별성을 보였다. 양자는 1920년대 중반에 있었던 조선사정연구회 등에서의 활동도 함께 했다. 그렇지만 자치운동문제 신간회조직문제 등을 둘러싸고 전보다 분명하게 차이를 보였다.

3·1운동 이후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어로 쓰여진 신문과 잡지가 민족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신문 잡지의 경영진은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도 있었지만, 개량주의자, 예속

참변연구>, 한국사연구 111(2000. 11.), pp.152-168 참조)

198)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pp.205-212

199) 윤병석, <1920년대 만주에서의 민족운동과 군정부> ≪국외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pp.141-145

200) 1926년 1월에 개학한 황포군관학교 4기로 의열단 핵심단원 약 15명(4기 전체 韓籍학생 24명), 3월에 입교가 시작된 5기에 의열단원 약 80명(한인 전체 입교생 1백여 명)이었다.(金榮範, ≪한국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1997, pp.161-162)

자본가·동화주의자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사회개조·신문화와 사회주의사상의 유입과 확대속에 사회운동이 진전되고 기본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족주의적,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독자들, 특히 신학문을 접한 지식인층을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압수당하거나 삭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사 등을 실었다. 1920년대 중후반 신문과 잡지기자들 가운데는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다.

3·1운동 이후 결사의 자유가 일정하게 허용하게 됨에 따라 청년단체가 급속히 조직되었고, 1920년에는 노농단체도 각지에 조직되었다. 사회운동, 신지식·신문화운동을 이끌어갔던 청년단체 노농단체는 1922년을 전후하여 분화되기 시작하여 개량주의자들이 배척당하고 사회주의 성향의 활동가들이 점차 주도권을 쥐었다. 사회운동이 치열해지자 조선총독부는 민족분열정책으로 자치운동을 고무시키고자 했고, 민족주의자들은 정치활동 방안을 모색했다. 1923년 가을부터 나돌던 자치운동론은 <민족개조론>을 ≪개벽≫에 발표하여 논란을 빚었던 이광수가 집필한 <민족적 경륜>이 1924년 정초에 5일간에 걸쳐 ≪동아일보≫ 사설로 실림으로써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1월 중순 조선총독부와 기맥을 통하던 개량주의자들이 명망 있는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硏政會조직을 협의했으나, 동경유학생들과 갓 출범한 조선노농총동맹 등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쳐 이광수는 동아일보를 물러났고, 동아일보진용이 대폭 바뀌었다.

1924년 4월 창립대회를 가진 조선노농총동맹은 역사상 최초의 규모가 큰 전국적 노농단체였다. 같은 시기에 조선청년총동맹이 결성되었다. 이 두 규모가 큰 전국적 단체가 만들어진지 1년이 된 1925년 4월 비밀리에 조직된 조선공산당은 일본제국주의 통치의 완전한 타도,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첫 번째 목표로 내세웠고, 그와 함께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실현시킬 것을 강조했다.[201] 한편 1923, 4년경부터 논의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협동전선문제는 1925년에 활발히 논의되다가 1926년에 들어와 구체화되었다. 민족주의자들의 동정을 탐색하던 제2차 조선공산당 간부들은 1926년 3월에 비타협 민족대회를 만주에서 열어 중국의 국공합작처럼 국민당을 조직하여 공산당원이 그 속에 들어가는 방안을 논의했다.[202]

申錫雨 安在鴻 權東鎭 등과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姜達永 등의 논의는 일제와 기맥을 통하고 있었던 천도교 신파 지도자 崔麟의 타협노선 때문에 중지상태에 있었는데 융희황제가 죽음으로써 민족협동전선의 모색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203] 조선공산당에서는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종교계 청년계 학생계 인사들로 대독립당 조직을 구상하였으나 서울파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하여 차질을 빚었다.[204] 그렇지만 천도교 구파와 사회주의자들의 연합이 이루어져, 노동단체 소작인조합 천도교교구 등을 이용하여 전국 58개 도시와 연결망을 만들었다. 그런데 일제 관헌 또한 3·1운동 발발 때와는 달리 서울과 지방의 요시찰자 등을 엄중히 감시하고 활동에 제한을 가했으며 여관 기차 버스정류장 등의 부근에 사복형사를 배치하여 수색을 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경찰서에서 구속을 했다.[205] 6월 6일 천도교 중앙총무부에서 발견된 격문으로 조선공

201)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pp.98-100
202) 서중석, <일제시기 사회주의자들의 민족관과 계급관>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연구≫ 지식산업사, 1989, pp.36-37
203)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편, ≪조선사상운동조사자료≫ 1, 1932, p.6 ; 梶村秀樹·姜德相 편, ≪현대사자료≫ 29, 일본 동경 みすず書房, 1972, pp.42-43
204) 張錫興,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초기 조직과 6·10만세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94, p.222
205) 1930년 10월 4일 在상해 重光총영사 보고, <공산당간부 具然欽의 취조> ≪현대사자료≫ 29, 일본

산당 중앙집행위원회위원이자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로 6·10운동투쟁지도특별위원회 책임자인 權五卨 등이 체포되어 규모가 큰 시위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6월 10일 서울에서의 시위는 일제 경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조선공산당 산하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학생들과 민족주의자들인 通洞系 학생들이 주도했고, 지방에서는 고창・인천・순창・평양・원산・개성・전주・마산・공주 등 여러 지역에서 시위가 있었다.[206]

6·10만세운동에서 준비된 전단 등에는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 "횡포한 총독정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자!" "보통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보통학교 용어를 조선어로! 보통학교장을 조선인으로!" "동양척식회사를 철폐하라" 등의 구호가 들어있었다.[207] 대한독립당 명의의 격고문은 민족해방이 곧 계급해방이고 정치해방이 곧 경제해방이라고 규정하고 식민지 민족은 뭐라고 해도 무산자라는 총체적 무산자론을 폈던바,[208] 대독립당 결성의 논리 곧 민족협동전선의 논리로 주목된다. 6·10만세운동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공동으로 싸웠고, 목적의식이 뚜렷했으며, 각계각층의 당면한 절실한 요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1운동 이후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한동안 주춤했지만, 6·10만세운동으로 다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 시기 사회주의자들은 민족단일당 결성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자들도 민족운동에 조직적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절감했는데, 일제와 연결되어 최남선 등 중견 개량주의자들을 중심으로 1926년 가을에 자치운동이 되살아나고 중국관내에서 유일당운동이 전개되는 것 등에 영향을 받으며 민족주의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신간회를 조직했다. 1927년 1월 20일 신간회 창립 발기인으로 발표된 27명은 신채호와 같이 국외 인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서울에 거주했고 조선일보계가 많았다. 신간회는 강령으로 1)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2)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3)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등을 내세웠다. 기회주의란 자치운동을 가리킨다. 2월 15일 창립대회에서 조선일보사장 李商在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부회장은 洪命憙가 고사하여 천도교구파의 권동진이 맡았다.

신간회는 1927년 12월 27일에 지회 1백개소 돌파기념식을 가졌고, 창립 1주년이 되는 1928년 2월 15일에는 지회 백 수십 개에 회원이 2만명이 넘었다. 본부는 주로 명망이 높은 민족주의자들로 구성되었지만, 활동은 사회주의자들이 많은 지회가 중심이었고, 특히 본부에 비판적인 동경지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했다.[209] 1927년 5월에는 신간회 자매단체로 여성들이 만든 槿友會가 조직되었고, 이해에 조선노농총동맹도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립되어 조선청년총동맹과 함께 3총시대를 열어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운동이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하고 굳건하게 펼쳐졌다. 그러자 일제는 신간회와 3총의 전국집회를 허가해주지 않아, 신간회는 할 수 없이 1929년에 複代表大會의 형식으로 許憲집행부를 출범시켰다. 허헌집행부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조사반을 파견했고, 그해 12월 10일에는 13일에 서울거리에서 광주학생사건진상발표대연설회 곧 민중대회를 계획하였다.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실행3

みすず書房, p.425

20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운동사자료집≫ 13, 1977, pp.167-231 ; 윤석수, <조선공산당과 6・10항일시위운동> ≪역사비평≫ 1989 봄, pp.114-116

207) 장석홍, <6・10만세운동의 격문과 이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 pp.160-161

208)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편, ≪조선사상운동조사자료≫ 1, 1932, pp.52-53

209) 梶村秀樹, <신간회연구를 위한 노트> ≪신간회연구≫ 동녘, 1983 ; 水野直樹, <신간회 東京지회의 활동에 대하여> ≪신간회연구≫

하려고 하자 일제는 허헌 홍명희 趙炳玉 등 신간회회원 44명, 조선청년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근우회 등의 관계자 47명을 구속하여[210] 허헌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중대회사건으로 허헌 집행부가 붕괴되고 새로 등장한 金炳魯집행부가 타협노선으로 기움에 따라 신간회는 위기를 맞았다.

민족유일당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신간회가 조직될 무렵 중국관내와 만주에서도 유일당운동이 일어났다. 6·10만세운동을 지원했으며 6·10만세운동에 고무된 중국관내의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유일당운동을 전개하였던바, 1926년 10월에 만들어진 대독립당조직북경촉성회를 비롯하여 상해 남경 광주 등지에 유일당촉성회가 잇달아 조직되었다. 북경 상해 광동 무한 남경 등지의 유일당촉성회는 1927년 11월 연석회의를 열었으나 그 뒤 유일당운동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만주에서의 유일당운동은 1927년초부터 정의부 및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앞장섰다.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및 여러 사회주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전개된 유일당운동은 1928년 5월에 열린 회의에서 구체화되었으나 단체본위 또는 단체중심의 조직을 주장하는 협의회와 기성단체의 해체와 개인본위의 조직을 주장하는 촉성회로 갈라졌다. 정의부의 다수파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는 1929년 4월 국민부를 조직하여 자치정부로 발족케 했고, 이어서 유일당으로 조선혁명당을, 이것에 소속된 군대로 조선혁명군을 편성했다. 촉성회측은 민족운동 단체로 혁신의회를 조직하고 유일당 결성을 위해 민족유일당在滿策進會를 조직했다. 부진함을 면치 못했던 재만책진회의 김좌진 등은 신민부를 기반으로 하여 한족총연합회를 만들었다.[211]

1929년 1월 하순에서 4월초까지 75일간에 걸쳐 있었던 원산총파업은 노동자총파업이었지만, 강한 사회의식 민족의식을 가지고 원산상업회의소, 일제의 무장경찰대와 무장기마헌병대, 반동어용단체 등과 한판 판가리싸움을 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시위인 광주학생운동은 한 저서에 의하면 1929년 11월부터 1930년 4월까지 참여 학교 194개교, 참가학생수 약 6만 명, 퇴학처분 받은 학생 582명, 무기정학 2,330명, 검거된 학생 1,642명으로 나와 있다.[212] 11월 3일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한일학생 충돌에 관해 편파보도를 한 광주일보사를 습격하고 일본인학교인 광주중학교 학생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시작된 광주학생운동은 독서회의 張載性 등에 의해 항일학생운동으로 발전했다.[213] 11월 12일의 제2차 투쟁에는 광주고보생 외에도 광주에 있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광주에서의 학생시위는 조선학생전위동맹 근우회 조선청년총동맹 등에 의해 바로 서울에서의 시위로 이어졌고, 그와 함께 시위는 전국 각 학교로 확대되었다. 가장 큰 규모로 시위를 벌인 서울의 경우 12월 2일부터 13일까지의 시위와 동맹 휴학투쟁에 10,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1,400여명이 검거되었다. 서울 학생들의 시위는 1월 15일부터 다시 격렬히 전개되었다.[214] 서울에서의 시위가 격렬해지자 신간회는 앞에서 언급한 바 12월 13일에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

210)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pp.208-212
211) 윤병석, <1920년대 만주에서의 민족운동과 군정부> ≪국외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pp.153-161 ;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아세아문화사, 1999, pp.160-180
212) 朴慶植,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p.312
213) 金貞和, <192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3, p.156
214) 姜在彦, <광주항일학생사건자료해설> ≪광주항일학생사건자료≫ 일본 風媒社, 1979, pp.30-36 ; 김정화, 앞의 글, pp.160-162

광주학생운동에서 나온 구호는 일제 지배정책에 대한 당시 학생 청년들의 반응을 잘 보여준다. 한 예로 12월 3일 서울에서 살포된 6개의 격문중 한 격문의 표어를 전문 그대로 실기로 하자.

"1. 식민지노예교육제도에 절대 반대하라!
1. 구금된 광주학생의 무조건 즉시 석방을 요구하라!
1. 대중적 시위운동을 조직하라!
1. 치안유지법 外 제악법의 철회를 요구하라!
1. 일본제국주의의 屯兵 일본이주민의 屯居에 절대 반대하라!
1. 군사경찰정치에 절대 반대하라!
1. 총독정치 절대 반대!
1. 타도 일본제국주의!"[215]

광주학생운동을 통해 전국 각지의 학생들은 일제의 교육동화정책을 식민지노예교육으로 단정하고 반대하면서 일제의 통치를 거부하였다.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에 대한 반대는 1920, 30년대 학생운동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1920년대 후반에는 민족해방운동전선에서 이전보다 구체적인 강령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강령 정책은 일제의 지배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이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제 타도 후, 곧 건국후의 강령 정책으로서 제시된 것이었다. 각별히 주목할 것은 이러한 강령 정책이 국내의 것과 국외의 것이 상당히 유사하고, 그러한 강령 정책이 상당부분 1930년대와 그 이후로 이어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독립운동이 국내와 국외 여러 곳에서 전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하는 바가 비슷하며, 그것이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 예로 1920년대 국외 민족해방운동 단체인 의열단의 강령과 국내 공산당의 강령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의열단의 강령은 1928년경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216] 조선공산당 강령은 조선공산당 기관지 불꽃 제7호 '조선공산당선언'에 실려 있는 것을 대본으로 하였다.[217] 불꽃 제7호는 1926년 9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6·10만세운동과 신간회결성 사이에 제작되었다.

의열단 강령은 첫 번째로 "조선민족의 生存敵인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근본적으로 타도하고 조선민족의 자유독립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공산당 강령은 前文에서 "당면한 투쟁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에서 조선을 절대로 해방함"에 있다고 명시하였다. 정치체제 정치제도, 기본권과 관련해서 의열단은 "2. 봉건제도 및 일체 반혁명세력을 剷除하고진정한 민주국을

215) 梶村秀樹·강덕상편, ≪현대사자료≫ 29, 일본 みすず書房, p.384. 이 구호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일본어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표현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16) 의열단 강령이 나온 시기와 관련해서 梶村秀樹는 1928-3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았고,(梶村秀樹, ≪조선사의 틀과 사상≫ 일본 研文出版, 1982, p.226) 廉仁鎬는 1928년 10월 의열단 제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기술했으며,(염인호, ≪김원봉연구≫ 창작과비평사, 1993, p.124) 김영범은 1926년으로 추정했다.(김영범, 앞의 책, pp.191-192) 의열단의 강령은 朴泰遠의 저서(박태원, ≪若山과 의열단≫ 1947) 외에도 여러 곳에 실려 있으나, 이 글에서는 박태원의 저서를 대본으로 했다. 의열단 강령이 수록된 자료집 또는 저서에 따라 표현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는 김영범, 앞의 책, pp.192-193 참조

217) 불꽃 제7호에 실려 있는 '조선공산당선언'은 ≪역사비평≫ 1992 겨울호에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것을 참조했다.

건립할 것, 6. 인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거주에 절대 자유권이 있을 것, 7. 인민은 무제한의 선거 及 피선거권이 있을 것, 8. 一郡을 단위로 하여 지방자치를 실시할 것"을 제시했고, 공산당은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되 국가의 최고 및 일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조직한 직접, 비밀(무기명투표), 보통 급 평등의 선거로 성립한 입법부에 있을 일, 2. 직접 비밀 보통 급 평등의 선거로 광대한 지방자치를 건설할 일, 5. 인민의 신체 혹 가택을 침범하지 못할 일, 6. 무제한의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급 同盟罷工의 자유를 가질 일" 등을 제시했던바, 공산당의 것이 약간 상세할 뿐 양자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경제문제, 노농문제, 사회문제,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의열단은 "3. 소수인이 다수인을 剝削하는 경제제도를 소멸시키고 조선인 각개의 생활상 평등의 경제조직을 건립할 것, 9. 여자의 권리를 정치 경제 교육 社會上에서 남자와 동등으로 할 것, 10. 의무교육 직업교육을 국가의 경비로 실시할 것, 13. 농민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貧苦농민에게 토지 가옥 器具 등을 공급할 것, 14. 工人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 평민에게 가옥을 공급할 것, 15. 양노, 育嬰 구제 등 공공기관을 건설할 것, 16. 대기관의 생산기관 及 독점성질의 기업(철도 광산 輪船 전기 水利 은행 等屬)은 국가에서 경영할 것, 17. 소득세는 누진율로 징수할 것, 19, 해외거류동포의 생명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귀국동포에게 생활상 안전지위를 부여할 것" 등을 제시하였는데, 공산당은 "7. 문벌을 타파하고 전인민이 절대 평등의 권리를 가질 일, 8. 여자를 모든 압박에서 해탈할 일, 9. 公私 각 기관에서 조선어를 국어로 할 일, 각종 학교에서 조선어로써 교수할 일, 10. 학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무료 또는 의무의 보통 급 직업교육을 남녀 18세까지 실시할 일, 빈민학령자녀의 의식과 교육용품을 국가의 경비로 공급할 일, 11. 각종 간접세를 폐지하고 소득세 급 상속세를 누진율로 할 것" 등을 주장하여 국외와 국내 주민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면 역시 양자간에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착취'의 철폐와 중요 기업의 국영은 공산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의열단 강령과 관련해서 ≪조선민족운동연감≫에는 13항이 "대지주의 토지를 몰수함"으로 되어 있는데,[218]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편 ≪思想彙報≫ 4(1935. 9,)와 그 이후에 나온 자료집에는 13항이 "조선인민의 생활을 침해할 외국인의 일체의 재산소유권을 박탈함"으로 되어 있고,[219] 박태원의 저서에는 13항이 아예 빠져 있는 것이 관심을 끈다. 1928년의 시점에서는 대지주 소유 토지의 몰수를 결정했지만, 1930년대 전반기 또는 중반기에는 우익 독립운동단체와의 제휴를 모색하고 있어서 그것을 조선인민 생활을 침해할 외국인 재산 몰수로 바꾸었다가 그 이후에는 그것이 어색했기 때문에 아예 뺀 것이었다. 공산당 강령에 토지 문제가 빠진 것은 1926년 9월을 전후해서 민족주의세력과의 협동전선을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의열단은 위의 것 이외에도 "5. 민중의 무장을 실시할 것, 11. 조선내 일본인의 각종단체(동척, 興業, 朝銀 등) 及 개인(이민 등)의 소유한 일체 재산을 몰수할 것, 12. 매국적, 偵探奴 등 叛徒의 일체 재산을 몰수할 것" 등이 들어 있다. 민중무장을 중시하고 있고, 敵產과 매국노 친일파 재산의 처리문제를 명시했다. 공산당강령은 "3. 전 국민의 무장을 실시하고 국민경찰을 조직할 일, 4. 일본의 군대 헌병 급 경찰을 조선에서 철수할 일"만 제시해 적산과 매국노재산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산당이 마지막 강령으로 "쏘베트사회주의연방공화

218) 염인호, 앞의 책, p.124 ; 김영범, 앞의 책, p.193
219)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편, ≪사상휘보≫ 4,(1935. 9.) p.146 ; ≪사상정세시찰보고집≫ (1936. 3.)(1976년에 일본 京都 사회문제자료연구회에서 다시 묶어냄) p.189 ;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편, 앞의 책 7(1936. 6.), p.32

국과 우의적 연맹을 체결할 일"을 넣은 것은 공산당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주장이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열단은 "4. 세계상 반제국주의의 민족과 연합하여 일체 침략주의를 타도할 것"이 들어가 있다.[220]

의열단은 급진 민족주의단체 또는 중도좌파단체로 볼 수 있는데 공산당 강령 정책과 양자가 비슷한 것은[221] 상해 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교류가 있었고, 공산당의 경우 1926년에 민족협동전선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도 주요 이유지만, 민주공화국과 평등이라는 양대 목표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강령 정책으로 수렴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것이 그 이후 급진세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독립운동계에서 수용된 것도 민주공화국과 평등을 지향했던 민족해방운동세력의 입장을 잘 담고 있어서였다. 다시 말하면 1920년대 후반기와 그 이후 독립운동세력은 활동시기와 지역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바, 그것은 독립운동자들이 건설하려는 한국 민족국가의 기본적 골격으로 이해된다.

4.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 독립운동

1) 1930년대의 독립운동

한인애국단의 金九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李奉昌이 1932년 1월 일본 왕궁의 서편에 있는 櫻田門 밖에서 일본천황의 공식 행렬에 수류탄을 던진 것도 독립운동세력 및 중국인한테 영향을 미쳤지만, 역시 김구와 밀접한 연계를 갖고 윤봉길이 4월 29일 상해 虹口공원에서 열린 일본군 열병식장에 폭탄을 던져 상해 파견 군사령관 白川義則대장, 일본 주중공사 重光葵, 제3함대사령관 野村吉三郎중장, 9사단장 植田謙吉, 상해 일본 거류민단장 河端, 상해총영사 村井倉松 등에 중상을 입혀 白川와 河端는 사망하고, 重光는 오른발을 잃었으며, 野村는 한 눈이 먼 사건은[222] 한국인한테 1909년 10월 安重根이 伊藤博文을 사살한 사건 못지않게 자극을 주었고, 특히 상해

220) 이상 박태원, 앞의 책, pp.29-31, 역사비평 1992 가을 pp.353-354 참조, 김영범이 의열단 강령과 불꽃 제7호에 실린 공산당의 강령을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김영범, 앞의 책, pp.195-200 참조

221) 정의부의 다수파가 중심이 된 협의회측에 의해 조직된 국민부의 강령도 "3. 노동자·농민의 소비에트정부를 건설하자"를 제외하면 의열단강령과 비슷하다. 1929년 9월 국민부 제1회 중앙의회에서 채택된 '朝鮮政勢에 대한 결정서'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를 근본적으로 박멸하고 조선의 독립을 완성하자.
2. 전민족의 혁명역량을 총집중하여 민족유일당을 급속하게 완성하자.
3. 노동자·농민의 소비에트정부를 건설하자.
4. 공장·철도·광산 등의 대생산기관을 몰수하고 국유로 하자.
5. 대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농민에게 무상대여하자.
6. 부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평등하게 하자.
7. 국가의 경영에 의한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자.
8. 일체 잡세를 폐지하고 단일누진세를 설치하자.
9. 자치운동을 박멸하자.
10. 세계 피압박민족과 견고하게 단결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자.
(이상 신주백, 앞의 책, p.209에서 재인용)

222) 李庭植, ≪한국민족주의의 운동사≫ 미래사, 1982, pp.236-240

사변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 중국관민에게도 다대한 영향을 주었다.

일제의 만주침공에 의한 중국과 일제의 전쟁, 윤봉길의 폭탄투척,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자 일부의 관내로의 이동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관내의 독립운동자들은 민족해방운동단체를 단결시키는 작업에 나섰다. 1932년 10월 한국광복동지회대표 김규식, 조선혁명당의 崔東旿, 한국독립당의 金枓奉, 한국혁명당의 申翼熙, 조선의열단의 朴建雄 등이 모여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의 조직에 합의하고 11월 10일 이를 발표하였다. 같은 시기에 대일전선통일동맹을 주축으로 하여 항일단체인 중국 동북의용군후원회위원인 吳山 등과 함께 中韓민중대동맹을 결성했다. 김규식은 두 단체의 대표격으로 1933년에 미국 각지를 순방하였던바, 대한독립당 뉴욕大韓人교민단,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등이 잇달아 가맹했다.[223]

그러나 대일전선통일동맹은 협의체의 성격을 벗어나기가 어려워 통일적 행동을 강력히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1920년대에 유일당운동 등을 통해 실현시키려고 하였던 大獨立黨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34년부터 대일전선통일동맹에 가담한 정당과 그 밖의 정치단체를 하나의 당으로 통합하는 작업에 나섰다. 통합신당 작업은 한국독립당의 일부 간부가 반대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나, 1935년 7월 남경에서 드디어 통합신당 건설에 합의하여 민족혁명당을 발족시켰다. 민족혁명당에는 한국독립당 조선의열단 조선혁명당신한독립당[224] 대한독립당 등이 해체하고 들어왔다. 그러나 宋秉祚 등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잔류세력, 한인애국단의 김구 등은 들어오지 않았다.

민족혁명당은 여러 정치세력들이 결집되어 있지만, 의열단과 한국독립당이 가장 중요한 정치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강 정책 또한 이 두 단체의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곧 黨義는 한독당의 삼균주의에 의거하였고, 黨綱은 의열단의 강령과 비슷하다. 이와 같이 당의와 당강이 각각 성격을 달리하는 단체의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당의 통일적 정치이념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게 하지만, 趙素昻의 삼균주의는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좌파에서도 수용할 수 있었고, 의열단의 강령도 상당부분 우파가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유력한 단체의 정강 정책이 통합정당의 당의와 당강으로 나뉘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민혁당 당의는 "본당은 혁명적 수단으로서 仇敵 일본의 침략세력을 박멸하여 5천년 이래 독립 자주해온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정치·경제·교육의 평등을 기초로 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여 국민 전체의 생활의 평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세계 인류의 평등과 행복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바,[225] 1930년에 조직된 한독당 당의에 新民主國을 건설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226] 의열단 강령 제2항에 있는 '진정한 민주국'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한독당 강의와 대동소이하다. 민혁당의 당강의 3대원칙은 의열단 강령의 제1항, 제2항, 제3항과 표현만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227] 당강의 나머지 14개 조항의 경우 토지문제에 대해 "9. 토지는 국유로 하여 농민에게 분급한다"가 들어가 있고, 12항으로 "국민 일체의 경제적 활동은 국가의 계획하에 통제한다"

223) 姜萬吉,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和平社, 1991, pp.46-47, 김영범, 앞의 책, pp.358-361 참조
224) 신한독립당은 만주에 있었던 한국독립당과 한국혁명당 등에 의해 1934년 2월 창립되었다.(김영범, 앞의 책, p.371 참조)
225) 강만길, 앞의 책, p.82
226) 盧景彩, ≪한국독립당연구≫ 신서원, 1996, p.83
227) 김영범, 앞의 책, p.393 참조. 그러나 강만길, 앞의 책, p.365에는 제2항의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민주집권의 정권'으로 되어 있다.

는 것이 새로 들어가 있으며, 의열단 강령에서 “4. 세계상 반제국주의의 민족과 연합하여 일체 침략주의를 타도할 것”이 “17. 자유・평등・互助의 원칙에 기초한 전세계피압박민족해방운동과 연결 협조한다”로 바뀐 것만 차이가 있다. 토지 국유는 한독당 당강 제5항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국유로 한다는 것을[228] 수용한 것이고, 경제적 활동의 계획과 통제는 의열단 강령을 제정할 때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으로 판단된다.[229]

민족혁명당은 중국 관내의 주요 지역에 지부를, 주요 도시에 區를 두었고, 군사부와 특무대를 설치하였고, 기관지 등을 발행하여 선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렇지만 내부 통합력이 약했고, 물적 인적으로 유력한 단체였던 의열단의 헤게모니에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계열 등이 반발하여 분열을 겪었다. 1937년 의열단계와 다른 단체 잔류세력은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재출발했다.

1933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에서 물러나 한인애국단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구는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의 대다수가 민혁당으로 합류하자 1935년 11월 임시정부에 다시 참여했다. 김구는 애국단을 중심으로 한국국민당을 조직해 임시정부를 적극 옹호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관내 독립운동세력은 통일전선체를 다시 모색했으나 실패했다. 그 대신1937년 8월 한국국민당과 민혁당에서 이탈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및 미주의 독립운동단체 등은 한국광복운동단체협의회를 조직했고,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청년전위동맹 조선혁명자동맹은 같은 해 11월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을 조직하여 대체로 우파적 단체와 좌파적 단체가 정리가 되었다. 두 단체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대동단결 종용을 받으며, 1939년 5월 두 단체의 영도자인 김구와 金元鳳 명의로 ‘동지동포에게 보내는 공개통신’을 발표했다. 이 통신은 다음과 같이 민족협동전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의 사상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절대적으로 동일정치조직 결성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원리는 있을 수 없다. 가령 주의 사상을 달리하여도 동일 對敵의 앞에 동일한 정치강령 아래 一組織의 구성분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들은 이미 소단체의 분립적 투쟁으로 인한 민족적 손해를 경험하여 통일단체에 의한 광명을 발견한 이상 일제히 단합하여야 한다. 해외에 있는 다수 동지 동포와 함께 먼저 관내 운동조직의 계획적 변혁과 광명을 갖는 신국면의 창조를 향해 절대한 자신과 용기로 전진해나가자”[230]

한편 김구 李靑天 김원봉 등은 1930년대 전반기에 청년들을 군사훈련시켰다. 1933년 김구는 중국 국민당의 陳果夫 등과 협의하여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 洛陽분교내에 한인특별반을 설립키로 합의하였다. 만주에서 활약하던 한국독립군의 이청천 吳光鮮 등을 교관으로 초빙하였던바, 1934년 2월 김구 김원봉 이청천 계열의 입교생과 그밖에 무정부주의단체 등에서 파견한 입교생 도합 92명으로 한인특별반이 편성되어 훈련에 들어가 1935년 4월 62명이 졸업했다.[231]

---

228) 노경채, 앞의 책, p.87

229) 앞절 말미에서 국민부의 강령이 의열단 강령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민혁당의 당의와 당강은 국민부를 지도하고 혁명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조선혁명당의 당의, 당강과 표현만 다르고 거의 똑같다.(조선혁명당의 당의 당강은 신주백, 앞의 책, pp.209-210 참조) 조선혁명당 당의와 당강을 적어놓은 일제 관헌자료가 만주의 조선혁명당의 것이라면, 민혁당이 조선혁명당의 것을 수용한 것이 아니고, 조선혁명당이 민혁당의 것을 수용했다고 판단된다. 민혁당의 당의 당강은 한독당과 의열단의 합작품이기 때문이다.

230) 통신 전문은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편, 앞의 책 20, pp.244-251 참조

1938년 10월 10일 무한에서 발족한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대이자 중국군사위원회 휘하부대였다. 제1區隊 43명은 조선민족혁명당원들이었고,(구대장 朴孝三) 41명으로 구성된 제2구대는 사회주의자들로 구성된 조선전위동맹원이었다.(구대장 李益星) 대장은 김원봉으로, 隊본부 인원까지 합하면 대원은 97명이었다.[232] 조선의용대는 전원 무한으로 쳐들어오는 일본군에 대해 무한방위전에 참전하였던바, 무한의 곳곳에서 선전고무사업을 하여 무한주민들에게 항일투쟁에 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때부터 1940년 하반기까지 조선의용대는 주로 특무활동을 했다. 적진 바로 앞까지 가 厭戰反戰情緖공작 및 철도 통신 파괴공작을 벌이고, 한국문 일본문 중국문으로 책자, 전단을 만들어 뿌리고 일본군 통행증을 위조하여 살포하고, 포로를 심문하고 의용대에 끌어들였다.[233]

1931년 9월 일제의 만주침공은 이 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의 성격을 바꾸어놓았다. 한국인 독립운동세력과 중국인 반일세력은 연합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전투의 방식도 소규모 유격전을 병행하거나 유격전 중심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유격전에 한국인 빨치산도 가담하였던 바, 민족주의계열의 독립군과 사회주의계열의 빨치산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항일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민족주의계열의 독립군으로는 한국독립군의 활동도 있었으나, 얼마후 주력이 중국관내로 이동하였고, 국민부와 조선혁명당 산하의 무장대오인 조선혁명군이 가장 오랫동안 싸웠고 혁혁한 전투도 많았다. 총사령 梁世奉이 이끈 조선혁명군은 1932년 4월 新賓縣 永陵街를 공격하여 80여명의 日·滿軍을 섬멸했고, 5월에는 6차례의 전투에서 적 1,000여명을 살상·포로·실종케 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때에는 대개 반일 중국군과 연합했다. 7월에는 조선혁명군 단독으로 通化縣 快大茂子에서 일·만군 80여명을 살상했다. 일제 자료에 의하면 이 해에 조선혁명군은 16차례에 걸쳐 101명의 대원을 국내에 침투시켜 군자금을 모집하고 일제기관을 습격하였으며, 친일파를 처단했다. 1934년에는 압록강 대안의 東邊道지방에서 출몰회수 730여건, 연인원 23,000여명으로 집계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일제는 1934년 6월에서 8월에 걸쳐 5,000여명의 만주군을 동원하여 중국 王鳳閣부대와 조선혁명군 등에 대해 '제4차 동변도 대토벌'을 감행했고, 9월 하순부터 다음달까지는 6천여 명을 동원해 제5차 공격을 가했다. 양세봉은 9월 중순에 희생되었다.[234] 조선혁명군은 1934년 8월 동북인민혁명군 제1독립사의 李紅光부대와 연합하여 싸우는 등 양세봉 사후에도 끈질기게 유격전을 계속하다가 1938년 초 약 60여명이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에 정식으로 가입했다.[235]

항일유격대에서 지도적으로 활동한 한국인은 적지 않았다. 1933년에 饒河工農兵반일유격대를 발족시킨 崔庸健은 중국인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제7군 군장대리, 제2로군 참모장 등의 중책을 맡았다. 1932년 賓縣 특별당부 서기로 임명된 金策과 선전위원으로 임명된 許亨植은 동북인민혁명군 제3군 제1독립사 제1단 정치부주임(김책), 제2단장(허형식), 北滿臨時省委員會서기(김책),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 총참모장 겸 제3군장(허형식) 등을 맡으면서 북만지방에서 유격전을 지휘

231) 韓相禱, <김구의 중국육군군관학교 한인특별반 운영과 청년투사 양성>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1, 백범학술원, 2003, pp.114-120
232)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출판, 2001, pp.70-74
233) 염인호, ≪김원봉연구≫ pp.221-223
234) 張世胤, <재만 조선혁명당의 민족해방운동연구>,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pp.198-208
235) 위의 글, p.216 ; 신주백, 앞의 책, p.416

했다. 이홍광은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독립사 참모장 등을 맡으면서 남만지방에서 혁혁한 전과가 있었다. 崔賢 등은 동만지방에서 유격전을 벌였다. 이밖에도 항일유격대에서 활약한 한국인 지도자가 적지 않다.

金日成이 최용건 등 다른 유격대 지도자들보다 국내와 만주의 한국인 사이에 명성이 높았던 것은 그가 활동한 지역이 북간도, 백두산 일대, 한중 국경지대 등 한국인이 많이 거주한 지역이라는 점도 작용했지만, 민족해방운동과 직접 연결되는 활동을 많이 벌였고, 전과도 많았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1932년에 항일유격대 간부가 된 김일성은 1933년 9월 중소국경지역인 東寧縣城전투로 명성을 얻었다. 이청천의 한국독립군도 가담한 吳義成軍 등 반일구국군과 김일성 등이 이끈 汪清 琿春에서 온 유격대의 동녕현성에 있는 일본군·만주군에 대한 공격은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중국군과 한국군의 합작이자 구국군과 유격대의 합작, 독립군과 빨치산의 합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김일성의 명성은 1935년 코민테른 제7회대회에서의 인민전선테제 채택, 중국공산당의 8·1선언 등으로 만주지방에서 동북항일연군이 성립하고 한국인이 독자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을 벌이게 되면서 한층 커졌다. 한국인의 독자적인 민족해방운동과 직결되어 있는, 1936년 6월 10일자로 된 '재만한인조국광복회선언'과 '재만한인조국광복회 목전 10대 강령(초안)',[236] 그리고 '재만한인조국광복회 10대 강령'[237]은 이 시기 독립운동의 기본방향을 밝힌 문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세 문건은 중국인민과의 연합을 강조한 것을 제외한다면, 1920년대에서 40년대에 걸친 여러 지역에서의 민족해방운동 강령과 대체로 성격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민족적 단결에 대해 그 이전에 나온 문건보다도 더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된다. 위의 선언은 공동강령의 첫째에서 "전민족의 계급·성별·지위·당파·연령·종교 등의 차별을 불문하고 백의동포는 반드시 일치단결, 궐기하여 원수인 일본놈들과 싸워 조국을 광복할 것"을 제시했다. 이 선언은 공동강령 제5항에서 민족해방운동의 통일적 총영도기관으로 국외 국내의 반일세력을 총집중하여 조국광복회를 건립할 것을 주장했다.

압록강 상류의 중요 국경도시인 惠山鎭에서 20km 떨어진 普天堡를 김일성의 6사가 강타한 사건은 국내외에 충격을 주었다. 김일성은 1937년 6월 90명의 대원을 인솔하고 압록강을 건너 현지에 집결한 80여명의 조국광복회 청년들과 함께 일본인 50명을 포함하여 1,383명이 거주하는 보천보의 주재소를 습격해 경기관총 1자루, 소총 6자루, 권총 2자루, 탄약 수백발을 빼앗았고, 농사시험장 면사무소 우편소 등을 습격해 건물 장부 우편물에 불을 지르고 점포 주택에서 현금과 물자를 빼앗은 뒤 삐라를 살포하고 철수했다.[238] 김일성의 활동은 1936년경부터 국내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보천보전투도 국내에 보도되었다. 국내 진공작전은 1937년 5월에도 최현부대에 의해 있었지만, 보천보전투는 한층 더 규모가 큰 승리였고, 그 시기에는 독립운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암울한 시기였는데 국내 신문에 꽤 크게 보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국내에 미친 영향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보천보전투는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 있다. 일제는 1937년 10월부터, 그리고 1938년

236) 이 두 문건은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편, 앞의 책 14, pp.60-64에 수록되어 있다.
237) 李鍾奭, <북한지도집단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pp.111-112
238) 和田春樹,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이종석역, 창작과비평사, 1992, pp.156-163

8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조국광복회 관련자 739명을 체포했고, 이들 중 權永壁 등 6명이 사형선고를 받아 병으로 집행이 연기된 朴達을 제외하고 5명이 처형되었다. 일제에 의해 발각된 조국광복회는 중국 통화현 장백현을 중심으로 한 조직과 국내 함남 갑산군을 중심으로 한 조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6사(師長 김일성)의 지도를 받았는데, 산하에 區會 3, 지회 11, 분조 41, 반 6, 생산유격대 6 등이 있었다. 후자 또한 6사의 지도를 받았는데, 6사가 간접 관리한 한인민족해방동맹에는 반일청년동맹 반일회 반일정우회 등 9개 단체가 있었다. 6사는 이밖에도 갑산군과 삼수군 홍남 등에 조직된 여러 지회와 위원회 등을 직접 관리했고, 원산 등에 여러 조직을 추진하고 있었다. 조국광복회 국내 조직에는 갑산군 삼수군 풍산군 일대의 천도교 청년들이 가입했다.[239]

1931년을 전후해서 국내의 민족운동은 많은 변화를 보였다. 1928년 7, 8월에 열린 코민테른대회에서 민족부르주아지를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해 12월에 코민테른 정치서기국 동양부의 佐野學 瞿秋白 등이 작성한 12월테제에서 한국 공산주의자들에게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하에서 토지혁명을 주 내용으로 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현단계 혁명으로제시하고 부르주아 또는 민족주의자들을 배격할 것을 요구했지만, 1928, 29년까지 좌우합작은 잘되어 갔다. 그러나 1929년 12월 민중대회사건으로 신간회지도부가 검거된 이후 새로 들어선 신간회지도부가 개량주의노선으로 기울고, 청년총동맹 등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데다 세계대공황, 그것에 의한 일본과 한국에서의 공황과 일제의 사회주의운동 탄압 등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주의자들은 12월테제의 계급노선을 적극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1931년 5월 사회주의자들의 주도에 의해 신간회가 해소되었고, 혁명적 노동운동·농민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1930년대에 들어와 공산당재건운동과 혁명적 노·농운동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잇달아 체포되었지만, 이들의 조직적 활동은 계속되었다. 1930년대 중반에는 李載裕 등 500여명이 연루된 조선공산당재건 경성준비그룹사건이 있었다. 이재유는 1933년 경성트로이카 및 노동자가 비교적 많은 서울의 용산과 영등포 등에 하위 트로이카를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1934년 1월 체포되었다, 그러나 극적으로 서대문경찰서에서 탈출하여 경성제국대학교수 三宅鹿之助관사에 숨었다가 빠져나와 조선공산당재건경성준비그룹을 조직하여 2년 동안 활동하다가 1936년 12월에 체포되었다.[240] 1937년에는 李舟河 등이 원산에서 노동조합 원산좌익위원회 및 그 하부기관으로 원산철도위원회·화학위원회·금속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노동자신문을 발행했다. 그리고 이주하와 연락을 하면서 崔容達 鄭鎭泰 등은 경성제국대학 내에 독서회 등을 조직하는 등 활동을 하다가 1938년 10월 110명이 일제히 검거되었다. 마지막으로 큰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사건은 1940년에 있었다. 1939년 출옥한 朴憲永은 이재유사건에서 체포되지 않은 李觀述 金三龍 등과 함께 공산당재건을 위한, 일명 경성콩그룹으로 알려진 콤뮤니스트그룹을 조직했다. 이들은 박헌영을 지도자로 하여 조직부 인민전선부 학생부 등을 두고 금속·섬유·전기·출판노조에 파고들었고, 함남북지방 등의 주요 지도자들과도 연결했다. 경성콩그룹은 화요파, 이재유계, ML계 등 여러 계열이 함께 일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들은 1940년 12월부터 체포되기 시작하였다. 박헌영은 광주로 내려가 벽돌공장에 은신하다가 해방을 맞았다.[241]

---

239) 이종석, 앞의 글, pp.117-124
240) 金炅一, ≪이재유연구≫ 창작과비평사, 1993 참조
241)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pp.152-157

사회주의자들은 끊임없는 투옥을 불사하고 치열하게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그렇지만 1930년대 이들은 좌경노선에 기울어져 있었다. 이들은 1935년 코민테른 제7회 대회에서 인민전선테제가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옥중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알고 있었다. 경성제대를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중이던 李康國은 7회테제 독일어본을 역시 경성제대 동기생으로 동지였던 최용달 등에게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산그룹사건 관계자들조차도 형식적으로만 인민전선이론을 들먹였을 뿐 여전히 12월테제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이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좌경노선을 교조적으로 견지하고 있었던 것은 일제 지배의 특성 때문이었다. 이들은 일제관헌의 감시 때문에 대중 속에서 실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감옥 그것도 독방에서 훨씬 긴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사고가 단선적이었다. 또한 이들은 일제의 황국신민화운동, 천황제 파시즘, 끊임없는 침략전쟁에 강렬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전향의 강요, 보호관찰소 등에의 감금이나 감시 등을 통해서 사상의 굴절을 겪기도 했다. 그리고 사회 저명인사들이 일제 파시즘에 굴복하여 황국신민화운동, 파시스트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것을 목도한 것도 경직된 사고를 견지하는데 일조했다.

1930년대 후반기 특히 194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학생운동에서나 일반인의 항일운동에서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이 많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비밀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예컨대 일어상용 창씨개명 등의 황민화운동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비밀단체라고 볼 수 있는 명랑크럽・한글연구회・철혈단・輪讀會나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움직임 또는 종교활동과 관계있는 비밀단체로 생각되는 일편단심회・熱血會・東光社 등의 단체 등은 대체로 사회주의와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들 단체 가운데에는 윤독회(1939)에서 茶革黨(1940)에 이르기까지 300명이 관련된 대구사범학교 비밀단체처럼 큰 규모도 있고, 함흥학교의 철혈단, 춘천고보의 상록회처럼 비교적 큰 비밀단체도 있지만, 대개는 10명 내외였다.[242]

2) 1940년대의 독립운동과 건국준비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 독립운동자들은 조직을 재정비하거나 새로 만들면서 무장력을 강화시켰고, 일제의 패망에 대비하여 건국준비 활동에 들어갔다. 이러한 활동을 강력히 추진한 곳이 1940년 9월 중경에 자리를 잡은 대한민국임시정부였다.

1940년 5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끌어갈 통합 한독당이 발족했다.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의 주축인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은 5월 통합하여 민주주의중앙집권제를 조직원칙으로 한 한국독립당을 조직했다.(중앙집행위원장 김구) 한독당은 우파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당강을 보면 4항에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국유화하여 국민의 생활권을 균등화할 것”이라고 천명하여 사회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시정부・한독당은 1940년 9월에 광복군을 창설했다. 한독당은 당책에서 “장교 및 무장대오를 통일 훈련하여 광복군을 편성함”이라고 명시하였는데 그것이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

242) 조동걸, <한국근대학생운동조직의 성격변화> ≪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3, pp.261-263.1930년대 후반 1940년대 초 민족주의성향이 강한 학생들의 비밀단체 목록은 조동걸, 앞의 글, pp.264-271 및 卞恩眞, <일제전시파시즘기(1937-45) 조선민중의 현실인식과 저항>,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pp.344-352 참조

이로써 중경임시정부는 당(한독당)·政(임시정부)·군(광복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광복군은 초모공작으로 대원을 계속 늘려 1940년 말에는 1백 명을 넘게 되었다.[243]

일제가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한 다음날인 1941년 12월 9일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외무부장 조소앙 명의로 '대한민국임시정부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하여 일제에 선전을 선포하기 이전에 건국의 방략을 밝힌 '대한민국건국강령'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한독당의 국가건설론이기도 한 '건국강령'은 임시정부에 의해 1941년 11월 28일 발표되었다. '건국강령'은 總綱 復國 건국의 3장으로 되어 있다. 총강에서는 예로부터의 건국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원칙이 삼균제도에 있음을 밝혔다. 복국에서는 주권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의 과정을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제1기, 일부 국토를 회복한 제2기, 국토와 인민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지위와 자유의지로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될 완성기 등 3단계로 나누고 복국기에는 임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가 공무를 집행할 것임을 밝혔다. 건국에서는 삼균주의에 의거해서 국가를 건설하고 발전시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244]

중경의 독립운동자들은 일제의 침략전쟁 확대에 고무되는 한편 좌우합작을 이룩하여 임시정부를 강화하고자 했다. 통합은 먼저 군대부문에서 이루어졌다. 김원봉이 이끈 조선의용대는 주력이 화북으로 북상함으로써 곤경에 처했는데, 1942년 5월 중경잔류부대원은 광복군으로 합류했다. 이해 10월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을 비롯하여 조선혁명자연맹 조선민족해방동맹 관계자들이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임되었다. 통합정부로서의 성격은 1944년에 한층 강화되었다. 이해 4월에 임시헌법을 개정해 부주석제를 신설하였고 국무위원수를 늘렸던바, 이로써 좌파측이 부주석(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과 국무위원 5석을 맡게 되었다.[245] 또한 임시정부는 중국 미국에 대해 정부 승인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

광복군의 활동은 일제 패망을 앞두고 활발해졌다. 이미 광복군은 1943년 8월부터 舊조선의용대원을 선발대로 한 심리·선전전 특수요원을 인도·버마전선에 파견해 영국군과 공동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주둔 미국 전략첩보기관인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와 합작하여 국내진입작전을 추진했다. 광복군과 OSS 사이에 "광복군 대원들을 선발하여 첩보훈련을 실시하고 이들을 한반도에 침투시켜 적후방공작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독수리작전(Eagle Project)를 매개로 하여 1945년 5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훈련이 실시되었던바, 서안에 있던 제2지대와 阜陽에 있던 제3지대가 훈련을 받아 제1기생 훈련이 8월 4일 완료되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일제가 일찍 항복을 하여 국내진입작전이 좌절되자 김구는 挺進隊를 국내에 파견하고자 했다. 일제가 항복한 다음날인 8월 16일 광복군 지대장 李範奭 등 한국인 4명, OSS측 책임자 버드대령 등이 서안을 출발하였다가 상황이 나빠 다시 돌아와 18일 다시 서안을 출발, 서울 여의도비행장에 착륙했다. 그러나 일본군의 차단으로 되돌아왔다.[246]

1945년 9월 3일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는 대한민국임시정부 포고를 발표하여, 전국적 本選에 의한 정식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 과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각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대표와 저명한 각 민주영수회의를 소집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밝히고, 국내에 과도정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국내 일체 질서와 대외 일체 관계를 본정부가 책임을 지고 유

243) 김영범, <중경임시정부하 1942년의 군사통일>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p.176
244) 삼균학회편, ≪소앙선생문집≫ 상, 횃불사, 1979, pp.148-153
245) 韓詩俊, <백범 김구와 중경임시정부>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pp.146-148
246) 위의 글, pp.152-161

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247]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장개석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활동하였는데, 1940년대 화북지방에는 중국공산당 및 8로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이 활동하였다. 김원봉을 대장으로 한 조선의용대 주력은 1941년 6월 화북으로 북상하여 국민당지구에서 활동하다가 중국군사위원회의 동의 없이 팔로군 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청년들과 함께 1941년 7월 7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창설하여.(지대장 박효삼, 부지대장 이익성, 정치지도원 金學武) 독립적인 국제지원부대로 활약했다. 화북지대는 주로 선전활동을 전개했는데,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한국인도 중요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간부 양성, 敵區조직공작도 중요 임무였다. 화북지대는 전투도 몇 차례 가졌다. 1941년 12월에는 일본군 300여명이 제2대가 숙영하고 있는 胡家庄을 습격하여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1942년 5월 팔로군과 함께 치른 反掃蕩戰에서는 주요 지도자 陳光華 尹世胄가 전사했다.

1942년 7월 10일에는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제2차 대회가 열려 청년연합회를 화북독립동맹으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으로 개칭했다. 독립동맹 주석은 중경에서 모셔온 조선민족혁명당의 김두봉이었다. 독립동맹은 사회주의자들이 이끈 단체인데도 온건한 노선을 제시했다. 보통선거에 의해 독립·자유의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것도 그렇지만, 토지문제와 관련해서도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자의 일체 자산 및 토지, 일본제국주의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기업을 몰수하여 국영으로 돌리고 토지분배를 실행한다"라고 하였을 뿐 지주의 토지를 몰수한다는 주장은 찾아볼 수 없다. 다른 강령은 중경임시정부·한독당의 그것과 비슷했다.[248] 독립동맹은 화북의 각 지역에서 分盟활동에 힘을 쏟아 晉東南분맹(101명) 陝甘寧분맹(34명) 등 9곳에 분맹을 만들었고,(1943년 12월말 현재), 1943년 10월에는 하얼빈에 北滿특별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밖에도 일제가 지배하는 천진 북경 등에도 분맹이 계속 만들어졌고, 1944년에는 국내의 여운형과도 접촉했다. 1943년 12월까지 조선의용군 대원은 150-200명 정도였는데 그 가운데 3분의 2는 학생출신이었다. 그뒤 일본군부대에서 탈출한 韓籍 청년들이 가입하여 일제 패망 직전에는 850명 내외가 조선의용군이 설치한 군정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해방 당시에는 의용군이 1천명 내외가 되었다. 조선의용군 병력은 일제 패망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249]

중국 동북지방의 빨치산은 특히 1930년대 말부터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관동군이 1939년 10월 野副昌德소장을 대장으로 하여 일본군 만주군 그리고 경찰대 7만5천명의 병력으로 동남부치안숙정공작을 개시했다. 楊靖宇 김일성 최현 등에게는 현상금이 각각 1만원이나 걸렸다. 1940년 3월 김일성부대가 백두산 부근 和龍縣 홍기하에 있는 일본인 목재소를 습격하자 화룡현 경방대대 前田武市중대는 공격에 나섰지만, 김일성부대에게 전멸당하다시피 했다.[250] 그렇지만 일본군의 공격에 살아남기 위해 만주의 빨치산부대원들은 소만국경을 넘어 하바로브스크지방으로 들어갔다. 김일성부대도 1940년 10월 소련으로 들어갔다.[251] 소련에 들어온 항일연군부대는 처음에는 두 개의 營에서 활동하였는데, 1942년 8월에는 동북항일연군 敎導旅로 편성되었다. 1945년

247) 宋南憲, ≪해방3년사≫ 까치, 1985, pp.241-243
248) 鐸木昌之, <잊혀진 공산주의자들> ≪抗戰別曲≫ 거름, 1986, p.79
249)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제3장 이하 참조
250) 빨치산 관계자는 마에다중대가 단 한 사람만 살았다고 증언했고, 마에다측에서는 경찰대 145명중 살아남은 자가 20여명이라고 기술했다.(和田春樹, 앞의 책, pp.224-233)
251) 신주백, 앞의 책, p.432

7월말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며칠 앞두고 조선공작단이 결성되었다. 멤버는 김일성 최용건 김책 安吉 徐哲 金一 최현 등이었다.[252]

앞의 소절에서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국내의 반일운동에서 민족주의자들의 비중이 커간다고 기술했지만, 그러한 현상은 1940년대에도 나타났다. 1941년의 경우 사상범 검거상황을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전년의 668명에서 대폭 줄어 158명인데, 민족주의자는 72명에서 176명으로 늘었다. 1942, 43, 44년에는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각각 237명과 141명, 204명과 151명, 140명과 12명으로 민족주의자들이 월등 많다. 또 주목되는 것은 1940년대에 치안유지법 위반자 가운데는 관공리나 은행 등의 사무원, 종교관계자, 학교 교직원이 많다는 점이다.[253] 1940년대에는 '결전기'였는데도 유언비어 유포, 태업, 공출기피, 징용 징병 학병 등의 기피와 같은 소극적인 반일 움직임이 적지 않았다.

국외에서의 건국준비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일제가 패망할 경우 바로 입국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국내의 경우가 중요했다. 이 점에서 건국동맹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

여운형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을 내왕하며 정세를 관찰하고 동지들을 규합하였고, 1942년 초부터 치안대조직에 착수하고 식량문제 등에 대비했다. 그 해 말 투옥되었다가 6개월 후 석방된 여운형은 한층 더 동지규합에 힘을 쏟아 1944년 8월 건국동맹을 조직했다. 건국동맹의 강령은 대단히 간략했다. 첫째 각인각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일제를 구축하고 한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둘째 연합국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일체 독립을 저해하는 반동세력을 박멸하고, 셋째 민주주의적 건설과 노농대중 해방에 치중하겠다는 것이었다. 건국동맹은 독립동맹하고도 달라 좌우파가 함께 참여했다.

중앙조직 지방조직을 하면서 건국동맹은 치안대, 군사단체 조직, 국외 독립운동단체와의 제휴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 趙東祜 등으로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후방교란 활동을 벌이게 하였고, 만주군관학교 장교들을 소수 규합했으며, 북경을 거점으로 하여 독립동맹과 연결되었고, 중경임시정부와도 연락하고자 했다. 1944년 10월 조직된 농민동맹은 건국동맹의 우군이었다. 여운형은 학생·교사·철도원·여성 조직 등도 소규모로 하였고, 징용·징병·학병거부자들의 조직에 관여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과도 연락관계를 가졌다. 8월 11일경 일제의 포츠담선언 수락을 알게 된 여운형은 국호와 국기의 제작, 독립선언서의 작성 등을 맡겼다. 8월 15일 아침 조선총독부의 요청에 따라 遠藤柳作정무총감을 만난 여운형은 '1. 전조선의 정치범 경제범을 즉시 석방하라. 2, 집단생활지인 경성의 식량을 3개월분을 확보하라. 3, 치안유지와 건설사업에 아무 간섭을 말라. 4, 조선에 있어서 지도력이 되는 학생의 훈련과 청년의 조직에 간섭을 말라. 5, 전조선에 있는 각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우리 건설사업에 협력시키며 아무런 괴로움을 주지 말라"고 요구했다.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단지 치안 협조를 부탁하려던 遠藤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여운형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부터 전국의 옥문이 열렸다.[254] 여운형 등은 8월

252) 조선공작단의 간부에 대해 교도려 旅長 周保中은 김일성이 군사정치의 책임, 최용건이 당의 영도책임을 맡았다고 기술했고, 和田는 단장 김일성, 당위서기 최용건으로, 신주백은 서기 최용건 위원 김일성 등으로 기술했다.(和田春樹, 앞의 책, p.284 ; 신주백, 앞의 책, p. 490) 김일성이 조선공작단 영도책임을 맡았을 것이다.

253) 서중석, 앞의 책, pp.150-152

254) 李萬珪, ≪여운형투쟁사≫ 叢文閣, 1946, pp.168-191 ; 鄭秉俊, ≪몽양 여운형평전≫ 한울, pp.75-115

15일 아침 일찍부터 건국 활동에 들어갔다. 건국준비위원회부위원장 安在鴻(위원장 여운형)이 8월 16일 오후 3, 6, 9시 등 3회에 걸쳐 경위대의 신설, 정규병의 편성, 식량의 확보, 물자배급의 유지, 통화의 안정 등이 포함된 방송연설을 한 것은[255] 전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건준지부는 8월말까지 145곳에 결성되었다. 8월 16일부터 가동된 중앙건국치안대는 전국의 지방치안대, 학도대, 청년대 등의 활동을 통제했다. 전국 각지의 건준 지부와 치안대는 민중들에게 나라를 되찾았다는 감격을 느끼게 했다.[256]

Ⅲ. 결론

일제의 한국 지배의 특성은 다른 지역에서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 한국인은 반일감정이 강했고 독립을 희구했는데,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이 낮은 수준의 천황제 국가였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천황제 파시즘이 지배했던 일제는 한국이 대륙을 경영하는데 필수 불가분의 지역이므로 절대로 독립시켜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무단통치기, 황국신민화운동기가 아니더라도 집회 결사 언론 출판 등의 기본권이나 인권은 크게 제약을 받았다. 한국은 정치적 자유가 없었고, 일본천황에 直隷한 조선총독을 견제할 의회나 자문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네루는 상당부분 영국인들로부터, 또 영국의 교육과 문화를 통해 자유·평등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성을 배웠는데, 한국인은 부분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그것을 배웠으나, 일제의 억압과 차별, 인권유린을 통해 그것의 소중함을 배웠다.

한국에 대한 일제의 동화정책은 프랑스의 동화정책과 성격을 달리하였다. 그것은 처음부터 차별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한국인을 일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인간을 만들어 독립할 의지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한국인은 대일본제국에서 종속적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었고, 일본천황의 2등신민으로 존재하게끔 위치지워져 있었다. 그래서 일제는 한국인의 열등감을 조장하고 독립불능의 사고를 갖도록 하기 위해 식민사관이나 저열한 민족성론을 유포시켰다.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한국인을 열등시하는 사고는 일본제국주의자들만 이 아니라, 일본인 대다수가 당연시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일본인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혼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 그 점은 한국인도 비슷했다 - 심지어 한국인이 '황국신민'이 되고 징병의 대상이 되는 것도 싫어했다. 한국인이 '배반'하거나 참정권을 요구하는 등 일본인과 대등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시키거나 변질시켜 '충량한' 국민을 만드는 도구가 동화교육이었다. 동화교육은 1910년 강점해서 1945년 패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칼 차고 제복입고 일본어로 교수한 것은 인성교육에 반하는 것으로, 헌병과 경찰이 주민들에게 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행위였다. '국사' '국어' 교육과 수신교육은 동화교육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노예교육에 불만이었고, 노예교육을 가르치는 교원에 불만이었다.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

255) 森田芳夫, ≪조선종전의 기록≫ 일본 巖南堂서점, 1964, pp.80-81
256) U. S. Arm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1, (돌베개, 1988 영인) p.429 참조

인 학생들은 각각 다른 학교에서 공부했고 학교 명칭도 달랐다. 한국인 학생들은 1911년에 적령아동의 1.7%밖에 초등학교에 못 갔고, 1929년에도 18.6%밖에 못 갔다. 1942년에 취학률은 54.5%였다. 중등교육은 초등학교보다도 훨씬 더 문이 좁았다. 2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한국에 대학은 하나밖에 없었고 그것마저 학생의 대다수는 거주자중 극소수에 불과한 일본인이었다. 해방이 되자마자 학생들은 한국어로 교육을 받았고, 그것도 한글교과서로 공부를 했다. 한국은 참혹한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3년부터 의무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취학률이 1953년의 72.9%에서 1955년에 89.5%, 1960년에 95,3%였다.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기회는 일제 강점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대폭 증가했다.

황국신민화운동은 전체주의적 방식 또는 총력전의 형태로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시키고 천황제 파시즘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만들어내려는 운동이었는데, 군국주의 파시즘의 체제화, 침략전쟁의 확대와 관계가 깊었다. 이 시기에 한국인은 징용 징병 학병 등으로 끌려갔고,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갔으며, 각종 공출을 강요당했다. 일제 지배의 특성, 그 중에서도 황국신민화운동은 한국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민주주의의식, 다원적인 사고를 갖는데 어려움을 초래했다. 종교인 교육자 등이 포함된 한국의 유지 명사가 민족의식 말살운동, 군국주의 침략전쟁 찬양에 동원된 것은 그들의 해방 후 행태에 영향을 미쳤고, 사회주의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투옥되고 전향이 강요된 것 또한 그들의 해방 후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활동에 대한 일제의 극도의 억압과 탄압으로 민족운동은 제약을 받았고, 독립운동을 지하에서 전개하거나 국외에서 해야 했다. 국외의 독립운동은 만주, 중국관내, 러시아, 일본. 미주 등지에서 전개되었는데, 만주의 경우 남만·동만·북만지방으로, 중국관내의 경우 국민당정부지역과 공산당지배지역으로 나누어지기도 했다. 국외 각지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은 그 지역의 정치체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지역 당국과 일제로부터 (공동)탄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 이후에는 그 지역의 정부 또는 권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1910년대 독립운동은 의병 또는 비밀결사의 형태로 전개되기도 했지만, 독립운동 및 독립군기지건설운동이 호응을 크게 받았다. 이 시기 독립운동자들은 어느 곳에서건 대체로 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망명자·이주민들은 자치를 하면서 자유·평등을 갈구했다. 한말의 계몽주의는 국내에서 무단통치가 자행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나마 망명자·이주민사회에서 꽃을 피웠다. 망명자·이주민사회는 각별히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애국독립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근대문화 근대문명을 섭취하기 위해서였다.

1919년 3·1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도, 거의 모든 계층에서 들고 일어났다는 점에서도 일제지배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었다. 잔혹한 일제 지배를 받은 한국인은 국내서건 국외서건 독자적 국가를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3·1운동을 통해 평등사상, 정의와 인도주의가 확산되었으며, 한국인은 인간으로서, 계층·계급으로서 각성했고, 무단통치에 의해 좌절되었던 민족의식을 광범위하게 갖게 되었다. 민족해방운동이 과거와는 다른 규모로, 그리고 근대적 이념으로 무장되어, 상당부분 민중을 기반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3·1운동은 특히 한국인한테 교육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했다. 3·1운동은 일제의 통치를 변화시키는데 기축적 역할을 했다.

3·1운동에서 발현된 독립의지는 임시정부 수립과 무장투쟁으로 구체화되었다. 여러 곳에 세워진 임시정부는 일단 상해에 위치한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되어 상해임시정부는 일정하게 독

립운동의 사령탑 역할을 했다. 독립운동의 열기는 무장투쟁으로 이어져 서간도 신흥무관학교가 확대되었고, 무장력의 급속한 강화로 독립군은 봉오동전투 청산리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무장투쟁과 함께 의열투쟁도 전개되었다. 국내에서는 청년운동 노농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이 활발히 일어나 1924년에는 노농총동맹 청년총동맹이 조직되었다. 또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일제가 배후에 있는 자치운동을 배격하고 민족협동전선을 모색하던 중 6·10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6·10만세운동은 규모는 작았으나 조직적 투쟁적이었으며 일제 타도의 목표가 뚜렷하였다. 민족협동전선의 추진은 일단 신간회로 결실을 맺었다. 1920년대는 일제의 노예교육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이 끊임없이 전개되었는데, 1929년 11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은 시위를 벌이며, 노예교육 반대, 일제 타도를 외쳤다. 상해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 건설을 제시하고 보통선거제 실시를 시사하였는데, 독립운동단체들은 1920년대 후반에 일제를 타도하고 어떠한 사회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 한층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1931년 일제의 만주 침략 이후 독립운동은 다시 활발해졌고, 국외건 국내건 투쟁양상이 크게 변했다. 중국관내에서는 黨的 투쟁체의 건설을 모색하여 민족혁명당이 조직되었고, 무장투쟁이 중시되어 1938년에 조선의용대가, 1940년에 광복군이 조직되었다. 만주에서는 1920년대 후반기에 상대적으로 무장투쟁이 침체되었는데 이 시기에 들어와 반일중국군과 연합하여 적극적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 시기 이후의 항일투쟁은 대개가 유격전형태로 전개되었다. 김일성은 조국광복회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보천보전투는 국내외에 충격을 주었다. 조국광복회는 '광복'이라는 말이 시사하듯 보수적인 민족주의자들과도 제휴할 것임을 천명했다. 민족혁명당 강령과 조국광복회 강령은 유사성이 많은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정치이념이 다른 단체들 사이에 민주공화국 건설, 봉건적 요소의 철폐, 수탈·착취의 반대, 보통선거 실시, 기본권보장, 남녀평등 실현, 의무교육 실시 등의 강령 또는 정책 제시는 대체로 1920년대부터 많이 보이는 현상이었다. 1930년대에 중국관내의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채택한 삼균주의도 독립운동자들의 정치적 지향을 세 가지로 요약한 것이다. 어느 것이나 일제 지배하의 암담한 현실과 대비되는 정책으로, 그러한 현실에 대한 독립운동자들의 대안이었다.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이 한층 더 심하게 추진되고 강제연행이 강화되고 징병제 실시가 구체화된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내외 독립운동단체들은 일제타도의 민족해방운동을 벌이면서 건국준비를 했다. 중경임시정부는 1941년에 '건국강령'을 채택했고, 그 해 12월에 일제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해방이 되었을 때 임시정부는 과도정부의 역할을 맡을 것임을 천명했다. 1945년 7월말 김일성 최용건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선공작단은 일제 패망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일제 말 국내에서 조직된 건국동맹은 1945년 8월 15일 아침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치안 등 건국사업을 자신들이 맡을 것임을 밝히고 건국준비활동에 들어갔다. 남북 각지에 조직된 건국준비위원회 지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각종 치안대는 자기 지방의 치안을 맡으며 건국준비활동을 전개했다.

[비평문]

모리야마 시게노리

본 연구는 식민지기 일본의 지배 정책을 취급하는 전반부 24쪽과 한국의 독립운동을 취급하는 후반부 약33쪽으로 구성되어, 주로 식민지기의 정치를 대상으로 하는 상세한 기술적인 연구이다.

전반부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 한국인의 기본적 권리를 억압한 세계에서 유래를 볼 수 없는 가혹한 것이었음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강조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배정책이 가혹하게 된 원인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뒤늦게 해외침략을 수행한 일본과, 반일감정이 강하고 불안정한 한국 사이의 상호작용이었다.

둘째, 조선총독이 본국에서 독립된 존재로서 그 권력이 강대하고, 이를 견제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배하의 헌병과 경찰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셋째, 한국인을 차별하고, 식민지 사관 등에 의해 열등감을 조장하며, 일본에의 종속을 목적으로 한 동화정책이 일관하게 수행되었으며, 한국인의 대등화를 겁내었다.

넷째, 동화교육은 식민지기를 통하여 일관되게 행해졌으며, 그 내용은 일본어에 의한 교육 및 국사교육 등의 노예교육이었으며, 한국인의 교육 기회는 억제되었다.

다섯째, 황국신민화운동・교육은, 전체주의적 방식・총력전 형태에서, <천황제 파시즘>에 복종을 목적으로 행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에 의해 징병 및 징용을 실시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일본이 행한 극도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지하 또는 국외에서 행할 수밖에 없었던 타국에 비해 유례가 없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3기로 나누어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강조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10년대에는 국내에서 의병 및 비밀결사운동, 국외에서 독립운동・군기지건설운동이 일어났으며, 국내의 <혁신유림>및 국외의 다양한 출신의 지도자들은 공화제 실현을 목표로 하였다.

둘째, 3·1운동은 일본의 지배에 대한 총체적 부정이며, 일본의 지배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그 후의 근대적 이념에 의한 다양한 운동이 규모를 확대시키면서 전개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셋째, 1920년대에는, 국내에서는 청년운동 등 다양한 운동이 일어나 민족통일전선이 모색되었으며, 국외에서는 임시정부수립과 무장투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넷째, 1930년대에는 국내에서는 사회주의적 운동과 민족주의적 운동이 재생되었고, 국외에서는 만주침략에 대한 여러 나라의 반발을 배경으로 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

다섯째, 1940년대에는, 국내에서는 민족주의자가 건국준비운동을 전개하고, 국외에서는 선전포고 및 여러 나라들과 공조하여 무장투쟁을 속행하여 해방을 목표로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식민지기에 관한 현재 한국의 연구 상황을 개괄하고 대표하는 개설적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대부분이 서술적이며, 식민지기 상황의 일단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지배정책의 억압적 측면은 극히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지만,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식민지 통치를 경험한 한국인의 입장으로서는, 억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배의 다른 측면, 예를 들면, 중앙에 있어서의 집권적 관료통치, 지방행정제도, 일본식 근대적 자본주의 등, 식민지 통치가 도입한 다양한 제도 및 행동양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게다가 개개의 지적에 있어서도, 전체적 고찰에 기초한 것보다는, 억압적 측면에 적합한 것들만 선택했다는 인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일관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시대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인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초역사적인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또 조선총독의 권한 독립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관제개혁에 의해 시기별로 변화된 본국에서의 통제 측면은 서술이 없다. 나아가 동화정책・동화교육・황국신민화는 모두 동일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어, 논리적으로 정제되지 않았으며, 諸槪念 간에 존재하는 문제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그리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왜 지배정책이 가혹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인과관계적인 설명이 약한 점이다.

둘째로, 후반부의 한국독립운동에 관해서는, 우선, 여러 운동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여기서도 일관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독립운동이 성공하지 않았을까. 한국은 왜 자력으로 민족해방을 이룰 수 없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불충분하다. 나아가 지도자간・운동간에 왜 통일을 이룰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을 할 수 있다. 운동의 실태가 명확하고 또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고찰, 상대화의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 최대의 문제점으로, 식민지기에 있어서의 한국인의 대응이, 독립운동 이외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일본・구미・나아가 한국에서의 최근 연구를 보지 않아도, 한국인이 식민지기에 독립운동만 한 것은 아니다. 또 일본식 근대화의 도입은, 한국인 사이에 반발만 초래하였는가.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여러 관점에 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 아마 그것은 본 연구의 인과관계적인 분석이 약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복잡하고 풍부한 현실을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작업은 곤란이 따르겠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팽대한 사료와 싸우면서, 식민지기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재구성 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집필자 답변]

내 글에 대한 소개는 비교적 잘 종합했지만, 비판은 각도가 어긋나 있습니다. 나는 일제의 한국에 대한 지배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밝혀내려고 했지 모든 사항을 일일이 나열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럴 수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기적인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나의 주장은 시기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기의 기본적 지배정책의 성격이 어떠하였나를 구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동화정책, 동화교육, 황국신민화교육이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입니다. 동화정책, 동화교육, 황국신민화교육은 범주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크게는 동일한 성격을 지녔지만, 시기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을 권고합니다.

왜 지배정책이 가혹했는지도 서론에서 밝혔고, 논평자도 그것을 언급했는데, 어떤 점이 인과관계가 맞지 않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2장에서 왜 독립운동만 다루었느냐는 것은 그 부분만 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여 끝없이 나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자력으로 민족해방을 성취하지 못했는지를 쓰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은 억지 질문 아닐까요. 두려워 말고 팽대한 사료와 싸우라는 얘기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이해가 가지만 궤도를 벗어난 지나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